

전략연구 2019-02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김기흥 책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촌 인구의 감소 및 농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물론 포용성장을 위한 유력한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언급됨은 물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지 확보 문제는 청년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지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후계농업 육성이라는 ‘농업인력’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손에 꼽히는 정도로 관련 선행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 문헌 가운데는 일본의 전국농업회의소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에서 신규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가운데 농지와 관련한 접근성이 파악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청년과 관련한 개념의 혼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경영과 다양한 토지 소유 형태(계약

재배나 임대, 협업)에 관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역할의 범위를 분명히 한 가운데 청년 농업인의 개념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토지 접근성 문제는 유럽에서도 새롭게 진입한 귀농인 뿐 아니라 영농승계자에게도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사례에서는 청년 신규취농자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며, 전국농업회의소 및 지역 단위의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촘촘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농지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앞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문제를 농지와 연계하여 함께 논의하고 남은 농지를 청년층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하다고 하겠다.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 및 농지 정책

농업 부문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의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수 및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에서 전국 수준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청년 농업인 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정책은 국가 단위는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충남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청년을 육성하자는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이 실시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농의 기본이 되는 농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는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지원 규모나 여건이 좋지 못하다. 그 배경에는 ‘소유’에 집중해 있는 농지법이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국내와 일본의 농지법 비교 및 일본 정책 동향 정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일 농지법 비교에서는 농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농지의 ‘이용과 활용’ 면이 강화되고 있다. 또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단위 논의 체계 기반으로 농지와 관련한 이용증진 및 각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은 농지와 관련한 근래의 정책 동향이 모두 ‘이용’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용집적 강화와 농지중간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정비가 마련되어 있었고, 기존의 농업위원회 제도 재정비를 통해 실제 지역 단위에서 농지이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위원을 두는 등 이용증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의 지원과 동시에 지역 단위에서는 신규로 지역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농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제도 개선 검토와 더불어 지역 단위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가운데 지역 특색을 살려가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제4장 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조사

여기에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접근 실태를 살펴보았다. 심층 면담 대상자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별로 처해 있는 농지와 관련한 실태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충남의 여러 지역의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담에 이어 충남의 보다 많은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비승계창농 33명, 승계창농 34명의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심층 면담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는 지역마다 농지 시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농지를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매매의 자금의 어려움은 물론 임대인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식적인 임대계약서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나 계약 파기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시설 하우스 등 지상권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과정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와 논농사 위주의 임대와 타 작물 재배의 원칙 문제, 내정자 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었다. 청년층 가운데서도 특히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들에 대해 농지 확보를 위한 지역 단위의 논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대상 농업 관련 실태 설문 조사의 결과로는 영농상황 즉 토지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여부로 비승계창농과 승계창농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영농 경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농지 확보와 관련하여 양쪽 그룹 모두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부모나 친지, 지인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재점검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농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양쪽 그룹 모두 자금확보, 농지확보, 영농기술 습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 준비 단계에서부터 영농 후 1년간 취득한 농지 구입 여부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69.0%로 나타나 비승계창농의 경우는 농지를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며 승계창농의 경우는 28.1%로 일부를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득 농지 면적은 승계창농이 비승계창농에 비해 1.3배 높았으며 취득한 농지 금액은 비승계창농이 평균 1억 3천 6백만 원으로 승계창농 약 1억 1천 4백만 원에 비해 약 1.2배 높아 자금확보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농업경영 상황으로는 현재와 영농 초창기 1년차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농업경영 규모 변화는 우선 농업경영 경지면적은 비승계창농은 1년차에서 2019년 현재 1.2배, 승계창농은 1.5배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다. 비승계창농은 현재 82.5%, 승계창농은 97.0%가 임대한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 창농의 농지 임대 확보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가 유지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비승계창농이 승계창농에 비해 높은 수준의 농업매출과 농업소득을 기대하고 있었다. 유기농업과 무농약 실천과 관련해서는 실천의지가 높은 편으로 비승계창농에 비해 승계창농의 실천 비율이 높았고 양쪽 그룹 다 아직은 유기농에 비해 무농약 실천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현재 경영면에서 힘든 점으로는 비승계창농은 소득문제가 가장 높았고, 승계창농은 설비투자자금 부족과 운용자금 부족이 가장 높았다. 양쪽 그룹 모두에서 자금 문제는 힘든 것으로 나타나 준비 과정에서나 실제 영농 과정에서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농업 및 지역활동과 관련해서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지역농업 주체로 기대받고 있다는 응답이 승계창농에 비해 높았다. 지역에서 주체로서 기대받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비승계창농의 경우 농지와 같은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갈 수 있을지 열쇠가 될지 모르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5장 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방안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와 관련한 정책 수요를 정리하였고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하여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의 농지법의 기본 방향인 경자유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농지소유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농지에 대한 ‘소유’ 개념에서 나아가 ‘이용’에 대한 여건을 열어주는 적극적인 농지 활용에 대한 상위법 차원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농지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 차원의 조례안 마련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농지 관리 방식 및 주체의 설정 및 권한 등 농지와 관련한 지자체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도시군유지에 대한 농지로의 활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농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도시군 차원에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다양한 실천을 해나가는 농지위원회(가칭)와 같은 조직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지 문제가 지역 안에서 고민되고 논의되어 다양한 이용 실천 노력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업농장의 확대 등이 필요하며, 지역 단위에서는 마을 단위 계획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준비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가는 전 과정 가운데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차원의 다양한 지원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소유 중심의 농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제도로서는 임대와 합법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전문가, 지역 단위의 농민들과 현장의 청년들이 함께 꼼꼼히 검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농지 관리 방식 및 주체의 설정과 권한, 책임 등 농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논의를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내 농지 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의 농협이 라든지 청년 단체 등 지역 관련자들이 모여 향후 지역의 농업농촌의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3
1. 청년 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3
1) 국내 문헌 연구	3
2) 해외 문헌 연구	5
2. 일본 사례 연구	6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 및 농지 정책	15
1.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15
1) 충남 시군별 농업 현황	15
2) 충남 청년 및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18
2.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22
1) 충남의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22
2) 국내 청년 농업인 농지 정책	26
3) 농지법 한일 비교 및 농지 관련 일본 정책 동향	30
3. 시사점	51
제4장 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조사	53
1. 청년 농업인 심층 면담 조사	53
1) 심층 면담 조사 개요	53
2) 심층 면담 조사 결과: 일반 현황	54
3) 심층 면담 조사 결과: 농지 문제	74
2. 청년 농업인 실태 설문 조사	81
1) 설문 조사 개요	81
2) 설문 조사 결과	82

3. 시사점	114
1) 심층 면담 결과	114
2) 설문 조사 결과	115
제5장 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방안	119
1. 청년 농업인의 정책 수요	119
1) 청년 농업인의 기본적인 정책 수요	119
2) 농지 관련 정책 수요	121
2.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방안	122
1) 제도권	122
2) 비제도권	125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7
1. 결론	127
2. 정책 제언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 사전 자문회의 개최	135
〈부록 2〉 청년 농업인의 농업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137

표 목차

[표 1] 일본 농지내비게이션 활용 사례	11
[표 2] 교토부농업회의 사무국 주요 업무	12
[표 3] 교토부농업회의 회원 구성	13
[표 4] 충남 시군별 농가 및 농가인구 분포(8개년)	16
[표 5] 충남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17
[표 6] 충남 귀농·귀촌 인구 추이	18
[표 7] 충남 청년인구 현황(2019)	18
[표 8] 충남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추이	19
[표 9] 충남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20
[표 10] 충남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추이	21
[표 11] 충남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추이	21
[표 12]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22
[표 13] 친환경청년농부사업 개요	24
[표 14] 친환경청년농부사업 현황(2018~2020년)	25
[표 15] 청년 농업인 농지 지원 사업	27
[표 16] 귀농귀촌 분야 농지 관련 사업	27
[표 17] 농지은행 관련 사업 세부 내역	28
[표 18] 농지법 한일 비교	33
[표 19] 농업위원회 개정 세부 내용	41
[표 20] 농업위원회 정수	43
[표 21] 도도부현 농업회의 및 전국농업회의소 개정 전후	45
[표 22] 청년 농업인 심층 면담 대상자 개요	53
[표 23] 영농장소	82
[표 24] 연령(만)	83
[표 25] 성별	83
[표 26] 가족 수	84
[표 27] 최종학력	84
[표 28] 농가출신 여부	85

[표 29] 영농 전 업종	85
[표 3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수령 여부	86
[표 31]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지원수령 여부	86
[표 32] 영농 준비 기간	87
[표 33] 영농 이유	87
[표 34] 지역을 선택할 때 정보를 얻은 곳	88
[표 35] 농지를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89
[표 36] 판매처를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89
[표 37] 주택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90
[표 38] 자금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91
[표 39] 영농하는 가운데 힘들었던 점	92
[표 40] 영농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을 선택한 이유	92
[표 41] 영농 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93
[표 42] 영농 전 교육받은 주요 기관	94
[표 43] 교육기관의 선택 이유	94
[표 44] 기계 및 시설 등 취득비용	95
[표 45] 필요경비	96
[표 46] 농지 구입 여부	96
[표 47] 취득한 농지의 면적	97
[표 48] 취득한 농지의 금액	97
[표 49] 농지 취득시 활용 금융기관	98
[표 50] 전체 자기자본금	98
[표 51] 농지/기계/시설 취득, 영농을 위한 자기자본금	99
[표 52] 생활자금	99
[표 53] 영농자금 대출 여부	100
[표 54] 영농자금 대출시 지장을 느꼈던 부분	100
[표 55] 주거확보 방법	101
[표 56] 현재와 영농 초창기의 나이(만)	101
[표 57] 농업경영 규모 변화	102
[표 58] 주요 작목 변화	103
[표 59] 농산물 매출 변화	104

[표 60] 농업소득 변화	105
[표 61] 농외소득 변화	105
[표 62] 취업상황 변화	106
[표 63] 농업으로 생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106
[표 64] 생계 유지 시기 및 농업매출과 농업소득	107
[표 65] 생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107
[표 66]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실천	108
[표 67] 현재 경영면에서 힘든 점이나 과제로 삼고 있는 것	108
[표 68] 현재 생활면에서 힘든 점	109
[표 69] 영농 후 재배기술 상담처	110
[표 70] 향후 받고 싶은 교육	111
[표 71] 5년 후 농업경영 전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112
[표 72] 지역농업 주체로 기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13
[표 73] 지역과 융화 여부	113
[표 74] 청년 농업인의 전반적인 정책 수요	120
[표 75] 농지 관련 정책 수요	121

그림 목차

[그림 1] 친환경청년농부 광역법인 지원 사업 연차별 계획	26
[그림 2] 농업위원회 내 농업위원과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의 관계	44
[그림 3] 충남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계획 로드맵	126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촌 인구의 감소 및 농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물론 포용성장을 위한 유력한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언급됨은 물론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부터는 청년 창업농(후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1,600명 규모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2018년~)이 본격화되었으며 지역 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등 지방으로의 청년 이주와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노력이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마상진(2017)은 청년 농업인들의 창농 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68.0%), 농지(46.7%), 기본생활비 확보(37.7%) 순으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지 확보 문제는 청년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를 살펴보고 농지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현황 및 충남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정리하였고 지역 단위의 다양한 청년 농업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정리하여 참고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단위에 강력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국내와 비교하여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 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농의 계기와 영농 정착 과정의 어려움 등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농지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담아보았다. 이와 함께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설문을 통해 충남 청년들의 농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농지 문제와 관련한 여건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농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역할을 통해 구분하여 검토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방향이 ‘인력 육성’만으로는 안 되며 ‘농지’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가면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 청년 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1) 국내 문헌 연구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후계농업 육성이라는 ‘농업인력’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오해섭, 김정주(2002)는 농업 및 농촌의 인력개발사업은 미래 세대 육성 측면에서 중요함을 강조하며, 1980년대 이후 인력육성과 관련한 정책 흐름을 정리하고 서로 다른 요구와 다양성을 위해서는 지도 체계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임형백(2008)은 농업인력육성이 현직교육훈련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였다.

이은영(2014)은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2004~2013)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잠재적인 농업인력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강호, 마상진(2009)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농업생산성 기여도 평가 연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6년부터 농업생산성의 일정 부분에 기여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익수, 김병률(2011)은 농업인력의 고용 측면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농업 부문에서 노동경험기회를 확대하려면 농업인턴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후계농업인’이라는 용어에서 나아가 ‘청년 농업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엄밀히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 가운데서도 청년 농업인의 성격에 따라 그 대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창, 박은식, 고정숙, 조영숙(2007)은 정부가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필요성과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내에서의 청년 농업인의 조직 활동 강화의 역할 부분을 강조하였다.

김기홍(2016, 2017)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충남의 지원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형에 따른 각각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황인욱, 이소영, 주진수, 양주환, 김종숙(2018)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 특성을 밝히고 있다.

청년 농업인 연구 가운데서도 ‘농지’와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는 연구는 손에 꼽히는 정도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마상진 외(2017)는 청년 농업인 정착 실태 연구 가운데 청년창업농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청년창업농의 농지 규모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청년농 창업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68.0%), 농지(46.7%), 기본생활비 확보(37.7%) 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기홍(2018)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 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실습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천농장을 포함하여 청년의 정착에 필요한 과정이 지역 단위 논의 속에서 마련되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향미(2018)는 청년창업농(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대상자)을 대상으로 하여 농지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은행’의 이용 실태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활용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차하고 있으며,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외 문헌 연구

全國農業會議所全國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전국농업회의소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는 1996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신규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농업 차세대인재투자자금 대상자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참입자(귀농)의 경우, 농지 확보에 대한 정보입수처는 부모·형제·친지·지인(32.3%), 시정촌(28.7%), 연수처(28.1%), 농업위원회(25.6%), 농협(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자영농업취농자(경영승계)의 경우에는, 부모·형제·친지·지인(73.5%), 농업위원회(19.7%), 시정촌(11.7%), 일반농가·농업법인(10.9%), 농협(10.4%)의 순으로 나타나 귀농의 경우 지역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Zagata & Sutherland(2015)는 유럽의 청년 농업인 연령이 유럽연합통계청(35세)과 농촌개발규정(40세 미만)에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업 혁신과 지역차에 대한 평가, 농가승계 과정 등을 고려하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일관된 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농업인 문제를 농업경영체 늘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과 다양한 토지 소유 형태(계약재배나 임대, 협업)에 관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역할의 범위를 분명히 한 가운데 청년 농업인의 개념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지 접근성 문제는 유럽에서도 새롭게 진입한 귀농인 뿐 아니라 영농승계자에게도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나 의미 있는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Brian, Anne, Cathal, Maura, & Marie(2017)는 아일랜드의 농업 승계 문제를 경제적, 재정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일랜드의 현재 정책 하에서는 죽을 때까지 농장을 유지하는 것이 죽기 전에 토지를 이전하는 것보다 농부에게 더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조기은퇴와 영농승계를 위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영농 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며 정부의 과감하고도 면밀한 정책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Inwood & Sharp(2012)는 미국 중서부의 대도시 접경 두 개 지역의 가족농을 대상으로 영농승계가 농업의 유지나 변화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농후계자는 농업의

유지나 규모 확대 및 증산 혹은 상품화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 부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서도 대규모인 지 소비자 직거래 기반의 경영체 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다르게 나타났다. 농업재생산은 농업경영체의 활성화와 깊은 연관이 있어 정책적으로 토지이용과 경제적 지원정책과 함께 사회적 요소도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강조하였다.

Koutsou, Partalidou, & Ragkos(2014)는 그리스의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의 요소인 신뢰(trust) 레벨을 측정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고, 친구 및 지역의 자발적인 조직, 친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경제적 지원 사업 주체인 EU나 지방 조직에 대한 신뢰가 중간 정도인 것에 비해 공공 서비스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정부는 경제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스스로 컨트롤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한다.

2. 일본 사례 연구

○ 일본의 청년 신규취농자 육성 정책 개요

일본에서는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는 자를 신규취농(就農)자로 부르고 있으며 창업을 포함하여 고용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취농자¹⁾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신규자영농업취농자: 농가세대원으로서 자가농업에 취농한 자(경영승계형에 해당)
- ② 신규고용취농자: 고용형태의 취농자
- ③ 신규참입자: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가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는 자(귀농인에 해당)

1) 신규자영농업취농자는 농가세대원으로서 조사기일 전 1년 간 생활의 주요 상태가 '학생'에서 '자영농업 종사가 주'가 된 사람 혹은 '다른 곳의 근무가 주'에서 '자영농업의 종사가 주'가 된 사람. 신규참입자는 조사기일 전 1년 간 토지나 자금을 독자적으로 조달(상속, 증여 등을 제외)하고 새롭게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영의 책임자. 고용취농자는 조사기일 전 1년 간 새롭게 법인 등에 상근으로 고용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게 된 자(외국인 제외)

전국농업회의소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신규취농자의 취농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全國農業會議所全國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 2017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만 명대로 추이되던 신규취농자는 6년 만에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만 5,030명, 2015년). 이 가운데 49세 이하의 신규취농자는 2만 3,030명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농형태별로는 신규자영농업취농자(경영승계)는 5만 1,020명, 신규고용취농자는 1만 430명, 신규참입자(귀농)는 3,5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청년취농자 지원 정책은 1994년 취농지원자금 청년취농자 무이자자금으로 시작되어 2008년에 고용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 고용사업’²⁾을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취농급부금’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청년취농급부금 제도는 청년 취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준비 기간 2년간과 경영 개시 후 5년간 총 7년까지 연간 15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³⁾. 2017년 이후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현재 만 50세 미만까지로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 일본의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 실시요강’은 2012년 청년의 신규취농자 및 영농승계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 마련되었다(2016년 5월 9일 최종 개정). 사업 목적은 신규취농과 경영승계를 위한 것으로 이들을 위한 과제로 크게 기술습득과 소득 확보가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 취농 전후의 청년취농자에 대한 급부금의 지급과 농업법인 등 청년취농자의 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연수 조성, 고도의 경영력 및 지역리더로서 인간성을 양성하는 농업자경영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취농에 관한 상담체제 정비

-
- 2) 고용취농자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지원(조성) 금액은 연간 최대 1,200만 원이고 지원(조성)기간은 최장 24개월임.
 - 3) 준비형의 경우 도도부현 지자체가 인정하는 도부현 농업대학 및 선진농가, 선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취농자도 포함됨. 경영개시형의 경우, 복수의 신규취농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공동경영을 할 경우에는 신규취농자 각각 최대 150만 엔을 지급하며 부부가 같이 취농할 경우(가족경영협정, 경영자원의 공유에 의해 공동경영자인 것이 명확할 경우) 합쳐서 1.5인을 지급함. 경영국 취농 및 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부 주체는 도도부현 지자체 및 청년 농업인육성센터,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됨. 교부 후 1.5배 기간 동안 영농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마련하였다.

관련 정책으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농지문제와의 관련하여 신규취농문제를 연계한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농지문제 해결가속화 지원사업 실시요강(2012년 2월)에 의한 사람농지플랜과 지역농업 경영재개재건 지원사업 실시요강(2011년 11월)에 의한 경영재개마스터플랜(이하, 사람·농지플랜)의 작성 및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과 농지집적·집약화대책사업실시요강(2014년2월)에 의해 지역에서 실시되는 농지집적 실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도도부현, 시정촌, 청년농업자등 육성센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농지중간관리 기구(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⁴⁾, 농업협동조합, 농업위원회, 도도부현보급 지도센터, 지역농업재생협의회 등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일본 재건전략’(6월 14일 각의결정)을 통해 신규취농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다.

- ① 중심적인 농업인력이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전농지의 80%(현재 50%)로 확대
- ② 신규취농하여 정착한 농업자를 2배로 늘려 40대 이하 농업종사자를 40만 명 (현재 20만 명)으로 확대
- ③ 법인경영체를 5만 법인(현재 1만 2,500법인)으로 확대

○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사람농지플랜은 2012년 사람농지문제해결가속화지원사업 실시요강(제정 2012년 2월 8일, 최종개정 2018년 3월 29일)에 의해 발표되었다. 배경으로는 강력한 농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락(마을)과 지역이 함께 심도 깊게 지역농업의 본연의 방향을 논

4) 농지중간관리기구는 향후 10년간에 영농주체의 농지 이용이 전 농지의 80%를 차지하는 농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지의 집적과 집약화로 비용 삭감을 실현하고자 함. 다른 말로 농지집적뱅크라고도 함. 도도부현 각 1개소가 마련되어 있음. 역할로는 농지에서 분산된 토지이용을 정리하고 영농주체별로 집약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경지방기지 등을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빌려서 농지가 필요한 법인경영이나 대규모가족경영, 집락영농, 기업에 빌려주고 있음. 업무 일부를 시정촌에 위탁하여 농지집적과 경작포기지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경영국 농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2016년 3월말 현재 전국의 농지 집적을 평균은 52.3%로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농업을 맡게 될 경영체와 생산기반이 되는 농지를 장래에도 확보해 가기 위한 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에서는 시정촌(시군, 읍, 면, 리)와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개인, 법인, 집락영농) 확보와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의 농지집적에 필요한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및 체질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해가는 데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각 시정촌에서는 집락과 지역이 안고 있는 ‘사람과 농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집락과 지역에서 논의를 통해 사람농지 플랜 개선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실시 주체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으로 두고 있다. 다음의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사람농지플랜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지역의 사람과 농지 현황(특히 가까운 미래의 농지 임대 상황)
- ② 향후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개인, 법인, 집락영농)
- ③ 중심적 경영체 확보 상황
- ④ 장래의 농지이용의 본연의 모습
- ⑤ 농지중간관리기구의 활용 지침
- ⑥ 향후 지역농업의 본연의 모습

사람농지플랜은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농지 이용 및 집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신규취농자 지원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람농지플랜이 마련된 지역에 한해 새롭게 진입한 청년신규취농자가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의 대상이 된다.

○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전국농업회의소(전국농업위원회 네트워크기구)

일본의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1951년 3월 31일 법률 제88호)에 의한 인가 법인으로서 1954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60여년이 지나 개정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2015년 9월 4일 법률 제63호)에 의해 2016년 4월 1일자로

‘일반사단법인 전국농업회의소’로 조직을 변경하게 되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입장을 대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회원 상호의 연락 조정이나 농업 일반에 관한 의견 공표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 증진과 농업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정촌농업위원회, 도도부현농업위원회 네트워크기구(이하 도도부현농업회의)의 사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로는 다음 6가지가 있다.

- ① 도도부현농업회의 상호의 연락조정 및 도도부현농업회의에 관한 지원
- ② 농지에 관한 정보 수집, 정리, 제공
- ③ 농업경영자, 신규취농·신규참입 희망자에 대한 지원
- ④ 농업경영 법인화 등 경영지원
- ⑤ 인정농업자 등 농업인력의 조직화 및 조직 운영 지원
- ⑥ 농업 일반에 관한 조사와 정보제공

이외에도 ‘농지 등의 이용 최적화의 추진’에 관한 시책 개선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직사업본부 아래에는 농정·경영대책부와 농지·조직대책부가 마련되어 있는데 농지·조직대책부에서는 농지와 관련하여 ① 농지제도에 관한 것과 ② 농지정보공개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의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는 취농상담을 비롯하여 농지 찾기와 빈집 찾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체험정보, 구인·경영이양정보, 지원정보, 농업경영자에 대한 정보,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농상담은 ‘독립 혹은 자영취농’과 ‘고용취농’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취농과 관련해서는 ‘농업인턴십 팸플렛’과 ‘상담안내독본’, ‘농업을 시작하는 가이드’, ‘신규취농상담 팸플렛’ 등의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다. 체험상담과 관련해서는 농업법인 등 취농

체험(농업인턴십)과 취농준비학교에서의 농업체험으로 나누어진다. 구인·경영이양정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농업법인 등 구인정보와 농업경영인 생산성 향상 사이트(일하는 방법 혁명), 농업경영의 승계 관련 정보, 퇴직예정자위대의 구직정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 정보로는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이나 지자체 등에 의한 신규취농 지원정보, JA(농협)그룹의 신규취농지원, 농지 찾기, 빈집 찾기, 생활관련시설 찾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농지 찾기와 관련해서는 시정촌이나 농업위원회가 정비한 토지대장 혹은 농지에 관한 지도에 대해 운영관리하는 단체인 전국농업회의소가 농업위원회 등과 공표사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사이트(전국농지내비 <https://www.alis-ac.jp/>)와 연계되어 있다. 빈집 찾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빈집뱅크’ 조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https://www.akiya-at-home.jp/>).

[표 1] 일본 농지내비게이션 활용 사례



○ 일본의 교토부의 청년 신규취농자 지원 정책

일본 교토부에서는 ‘교토 어그리 21’이란 이름으로 신규취농과 관련해 지원하고 있다. 토지문제에서부터 신규취농, 농업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업주체는 기존에

사업을 수행해 오던 공익사단법인 교토부 농업종합지원센터⁵⁾가 2018년 7월 교토부농업회의⁶⁾와 합병하여 ‘교토부농업회의’로 통합된 상태이다.

교토부농업회의의 주요 업무로는 농지중간관리기구 업무인 농지집적 관련 사업과 신규취농지원사업으로 취농 상담 역할을 하는 농림수산업 잡(job)카페, 청년 농업인들의 예비 교육 과정인 인력양성 실천농장 정비사업과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경영력 향상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 비즈니스 센터 관련 사업으로 6차산업화 및 농업비즈니스 코디네이터 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크게 농촌창업부와 인력창업부로 나누어지는데, 핵심 과인 농지이용최적화추진과 및 과 내부의 농지중간관리사업추진실에서 농지의 임차와 농지집적을 위한 사업을 담당한다. 인력창업부에서는 신규취농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교토부농업회의의 주요 회원은 지역의 농업위원회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로 구성된다.

[표 2] 교토부농업회의 사무국 주요 업무

부서	담당	업무
농촌 창업부	총무회계담당	회계경리, 예산경리, 결산, 대부자금관리
		여성위원모임, 신문·도시·농업인연금회계, 서무
	기획농정과	총회, 이사회, 상설심의위원회, 정책제안, 전국농업신문, 광고
		농지법(상담), 농지세제, 도시농업, 농업체험농원, 농업인연금
	농지이용최적화추진과	지구연락회의지원, 농업위원등 연수, 모델팜 추진
		농지대장정비지원, 농지정보공개지원, 휴경농지조사·재생대책
	농지중간관리사업추진실	농지중간관리사업, 임차희망자등록, 이용집적·배분계획
		등록휴경농지조사·재생정비, 기구관련토지개량사업
	이주촉진실 (교토이주센터)	이주상담·지역매칭·현지안내업무, 이주정보발신
		빈집발굴지원, 이주촉진특별구역연계

5) 구 농업종합지원센터는 1970년, 사단법인 교토부 농업개발공사로 설립되어 2012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교토부 농업종합지원센터와 교토부 농업회의, 교토부 농림수산부의 연대 강화를 위해 ‘교토부 농업농촌창업센터’를 설치했고, 2016년 7월에 센터 내 ‘교토 농업인재육성센터’ 설치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주력해 왔음

6) 구 교토부농업회의는 2017년 교토부 지사의 인가를 얻어 농업위원회법에 따라 특별법인(농업자 대표조직)으로 설립. 농지와 중심적 농업인력 업무를 중심으로 농업, 농촌의 진흥과 농민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옴

부서	담당	업무
인력 창생부	경영상담·농인재육성과	농업인재육성센터, 경영연수, 경영인력양성실천농장
		신규취농상담(농림수산 잡카페), 취농인턴십
		농 고용사업, 신규취농 지원, 외국인재고용지원
		농업경영상담소, 전문가 파견, 농업인력창생위원회
	법인화추진실	농업법인경영자 회의·간담회 지원
		법인화지원, 부기연수
	농업비즈니스과	6차산업화·농상공연대지원, 비즈니스 코디네이트
		판로개척·수출비즈니스 지원, 비즈니스 플랫폼

[표 3] 교토부농업회의 회원 구성

구분	회원
회원 구성	부내 전농업위원회 회장(26회장), 학식자(5명), 부내 전시정촌(15시10정1촌), 교토부, 교토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교토부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교토부분부,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교토부분부, 교토부 토지개량사업단체연합회, 교토부 농업공제조합, 교토부 삼림조합연합회, 교토부 농업협동조합. 기타 4JA
임원 이사	농업위원회 회장 5명, 학식자·법인단체 추천 5명, 시장회·정촌회 추천 2명, JA중앙회·신협연·전농 3명, 관계농업단체 대표 1, 사무국장 1명. 총 18명
임원 감사	농업위원회 회장 1명, JA 1명, 세무사 1명
상설심의 위원회	농업위원회 회장 13명, 학식자 5명, JA그룹 임원 1명, 관계농업단체 임원 1명, 업무집행임원 1명
인력창생 위원회	농업법인 경영자 2명, 집락영농대표자 2명, 인정농업자 등 3명, 신규취농자·참입기업 2명, 학식자 1명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 현황 및 농지 정책

1.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1) 충남 시군별 농업 현황

2018년 현재 충남의 농가는 123,480호로 전국 농가 1,177,318호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의 농업인은 276,426명으로 전국 농업인 1,501,064명의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1.8%로 증가하고 있고, 충남의 농가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2.5%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3.6%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충남에서는 4.3%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농가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 충남의 연령별 농가의 비율은 50대 이하가 전체의 7.8%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경우 92.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의 농가의 평균 연령은 무려 66.3세로 전국의 평균 연령 65.6세보다 0.7세나 높게 나타나 충남 전체의 농업 부문에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충남 시군별 농가 및 농가인구 분포(8개년)

(단위 : 가구, 명, %)

행정 구역별	2010		2018		농가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	농가인구	농가	농가인구		
전국	1,020,838	1,130,435	1,177,318	1,501,064	1.8%	3.6%
충청남도	151,424	394,324	123,480	276,426	-2.5%	-4.3%
천안시	12,406	36,774	11,477	27,799	-1.0%	-3.4%
공주시	12,089	31,577	9,554	22,287	-2.9%	-4.3%
보령시	9,006	22,632	8,098	17,542	-1.3%	-3.1%
아산시	10,499	30,019	8,835	20,971	-2.1%	-4.4%
서산시	13,320	33,778	9,833	21,375	-3.7%	-5.6%
논산시	11,925	31,185	10,466	22,903	-1.6%	-3.8%
계룡시	549	1,647	514	1,206	-0.8%	-3.8%
당진시	-	-	11,702	26,870	-	-
금산군	7,638	19,188	6,284	13,795	-2.4%	-4.0%
연기군	5,520	15,228	-	-	-	-
부여군	10,905	27,798	8,615	19,607	-2.9%	-4.3%
서천군	7,136	17,255	6,641	14,156	-0.9%	-2.4%
청양군	6,427	15,694	5,761	12,264	-1.4%	-3.0%
홍성군	11,082	28,274	8,411	17,289	-3.4%	-6.0%
예산군	11,118	28,280	9,896	22,629	-1.4%	-2.7%
태안군	8,315	19,266	7,393	15,733	-1.5%	-2.5%
당진군	13,489	35,729	-	-	-	-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농가인구

[표 5] 충남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세)

행정 구역	20 ~29	30 ~39	40 ~49	50 ~59	60 ~64	65 ~69	70 ~74	75 ~79	80세 이상	합계	경영주 평균연령
전국	792	13,574	84,025	246,824	161,298	170,860	165,210	152,166	93,769	1,088,518	65.6
충남	89	1,452	8,813	28,450	19,204	21,158	20,128	19,301	13,413	132,008	66.3
천안	9	131	1,041	3,239	1,894	1,750	1,468	1,293	826	11,651	63.9
공주	5	117	720	2,458	1,502	1,545	1,431	1,337	1,036	10,151	65.7
보령	5	80	520	1,741	1,283	1,439	1,423	1,296	859	8,646	66.7
아산	8	109	713	2,144	1,410	1,459	1,360	1,395	865	9,463	65.8
서산	4	130	758	2,469	1,677	1,989	1,981	1,862	1,359	12,229	66.9
논산	10	150	727	2,457	1,600	1,677	1,576	1,400	975	10,572	65.6
계룡	1	10	60	152	104	76	77	42	36	558	63.0
당진	3	100	721	2,286	1,667	1,951	1,780	1,784	1,241	11,533	66.9
금산	6	67	479	1,454	983	1,044	1,028	1,036	686	6,783	66.3
부여	13	124	624	2,177	1,472	1,551	1,458	1,317	871	9,607	65.8
서천	5	71	310	1,138	897	1,156	1,138	1,139	797	6,651	68.0
청양	2	82	495	1,362	910	1,006	995	1,148	837	6,837	66.9
홍성	9	122	689	1,908	1,312	1,535	1,472	1,442	1,139	9,628	66.7
예산	3	101	631	2,169	1,504	1,653	1,527	1,650	1,076	10,314	66.7
태안	6	58	325	1,296	989	1,327	1,414	1,160	810	7,385	67.9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경영주 연령 및 교육정도별 농가

충남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가구원을 포함한 귀촌인구는 439,535명으로 2014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가구원을 포함한 귀농인구는 17,976명으로 2014년 대비 32.9% 감소하고 있다⁷⁾.

7) 귀농귀촌 정의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 이하 귀농어귀촌법)하면서 귀농과 귀촌 정의를 수정하게 된다.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이외에 농어촌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를 '귀촌인'으로 정하고 있다.

[표 6] 충남 귀농·귀촌 인구 추이

(단위: 명)

구 분	'14년(A)	'15년	'16년	'17년	'18년(B)	증감(B-A)
귀농·귀촌인구	457,511	486,638	496,048	516,817	484,529	5.9%
귀농인구	17,976	19,860	20,559	19,630	12,055	-32.9%
귀촌인구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7.5%

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

2) 충남 청년 및 청년 농업인 관련 현황

2019년 현재 충청남도의 18~34세 청년인구는 418,868명으로 충남도 전체 인구 대비 19.7% 차지하고 있다. 충남 시군별로는 천안시(160,562명), 아산시(64,818명), 서산시(33,532명) 순으로 청년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충남 청년인구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계		남		여	
	인구수 (18-34세)	도 전체 인구 대비 (도 청년 인구 대비)	인구수	성별	인구수	성별
합계	418,868	19.7%(100%)	227,275	54.3%	191,593	45.7%
천안시	160,562	7.6%(38.3%)	84,179	52.4%	76,383	47.6%
공주시	19,110	0.9%(4.6%)	10,455	54.7%	8,655	45.3%
보령시	16,320	0.8%(3.9%)	9,205	56.4%	7,115	43.6%
아산시	64,818	3.1%(15.5%)	34,960	53.9%	29,858	46.1%
서산시	33,532	1.6%(8.0%)	19,098	57.0%	14,434	43.0%
논산시	19,773	0.9%(4.7%)	10,820	54.7%	8,953	45.3%
계룡시	8,263	0.4%(2.0%)	4,424	53.5%	3,839	46.5%
당진시	30,854	1.5%(7.4%)	17,566	56.9%	13,288	43.1%

구분	계		남		여	
	인구수 (18-34세)	도 전체 인구 대비 (도 청년 인구 대비)	인구수	성별	인구수	성별
금산군	7,064	0.3%(1.7%)	3,925	55.6%	3,139	44.4%
부여군	9,373	0.4%(2.2%)	5,240	55.9%	4,133	44.1%
서천군	6,779	0.3%(1.6%)	3,866	57.0%	2,913	43.0%
청양군	4,574	0.2%(1.1%)	2,574	56.3%	2,000	43.7%
홍성군	17,133	0.8%(4.1%)	9,244	54.0%	7,889	46.0%
예산군	11,734	0.6%(2.8%)	6,555	55.9%	5,179	44.1%
태안군	8,979	0.4%(2.1%)	5,164	57.5%	3,815	42.5%
충청남도 (전체인구)	2,125,349		1,082,259		1,043,090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2019. 7)

2018년 현재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농업종사자는 전국 단위에서 2010년 115,583명에서 2018년 39,06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연평균 12.7%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비중은 2010년 5.7%이던 것에서 2018년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남은 2010년 15,858명에서 2018년 4,55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연평균 14.4%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비중으로는 8년 사이 5.9%에서 1.7%로 큰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8] 충남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추이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종사자)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5,583 (5.69)	69,421 (3.57)	68,168 (3.63)	47,783 (2.71)	43,415 (2.50)	39,064 (1.77)	-12.7
충남	15,858 (5.88)	8,858 (3.45)	8,274 (3.59)	6,314 (2.95)	5,149 (2.44)	4,553 (1.72)	-14.4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연령 및 농업종사 기간별 농가인구(15세 이상)

한편 농업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수는 전국적으로 2000년 약 9만 2천 명에서 2015년 약 1만 4천 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비중으로는 2000년 6.6%이던 것에서 2015년 1.3%로 크게 감소하였다. 충남은 2000년 약 1만 2천명에서 2015년 약 1천 5백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비중은 2000년 6.7%를 차지하던 것에서 2015년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9] 충남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91,516 (6.61)	42,392 (3.33)	33,143 (2.82)	14,366 (1.32)	-30.9
충남	11,982 (6.67)	5,132 (3.14)	3,959 (2.61)	1,541 (1.17)	-33.6

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충남의 농업인 인력 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농업종사자⁸⁾는 2010년 전국적으로 113만 명에서 2018년 12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2010년 15만 3천 명에서 2018년 15만 7천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4%로 증가하고 있다. 비중으로는 전국적으로 2010년 55.6%에서 2018년 54.8%로 0.8%p 감소하였으며 충남은 2010년과 2018년 사이 56.6%에서 59.5%로 2.9%p로 전국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12.23 시행, 2009.9.27 전부개정, 1999.2.5 제정)에서 사용하는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2009.12.15, 2015.12.22 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농업 종사자'는 두 번째 조건인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표 10] 충남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추이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종사자)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29,748 (55.64)	1,185,682 (61.02)	1,177,979 (62.74)	1,178,272 (66.93)	1,200,224 (69.08)	1,208,167 (54.76)	0.8
충남	152,776 (56.61)	160,618 (62.60)	148,926 (64.57)	148,008 (69.26)	150,254 (71.20)	157,782 (59.50)	0.4

자료 : 통계청(2019), 농림어업조사, 연령 및 농업종사 기간별 농가인구(15세 이상)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농업경영주 수는 전국적으로 2000년 70만 명이던 것에서 2015년 74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비중으로는 2000년 51.0%에서 2015년 68.3%까지 증가하였다. 충남의 60세 이상 고령 농업경영주 수는 2010년 8만 8천 명에서 2015년 9만 3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비중으로는 2000년 49.3%에서 2015년 70.6%로 증가하였다. 전국 수준보다 2.3%p 증가한 수치다.

[표 11] 충남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706,148 (51.04)	741,815 (58.28)	716,557 (60.86)	743,303 (68.29)	0.3
충남	88,499 (49.29)	93,972 (57.58)	94,254 (62.25)	93,204 (70.60)	0.3

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조사.

2.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1) 충남의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2019년 현재 충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은 총 17개로, 이 가운데 국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은 5개, 충남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충남에서는 295명이 선발되었다.

도 자체 사업 가운데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 호응을 얻고 있는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청년층 육성을 위해 마련된 스마트팜 기술연수나 4차산업 관련 시범사업, 청년 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 조성, 청년 농업인 신성장 활동 사업 등은 주목할 만하다.

[표 12]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 대상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17종)	1,052 (개소,명)	7,365	2,128	953	2,692	1,59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95명	2,761	1,906	24	837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경영교육, 컨설팅
청년 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6개소	300	135	-	135	30	청년 농업인	가공·생산·상품화 시설 기반조성, 교육 등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150명	94	47	15	32	-	청년 농업인	전문가풀 구축 경영진단분석 현장컨설팅 지원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0개소	60	30	-	30	-	청년 농업인	선도농업인 농장체류 농업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습득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 대상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운영	30명	20	10	10	-	-	청년 농업인	농사체험, 정착사례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업의 이해 교류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11명	750	-	225	300	225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융복합 산업 중심 창농정책 기반조성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	6개소	184	-	55	129	-	청년 농업인	초보농부 영농여건 탐색 및 훈련농장 장기 영농인턴 실시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14개소	140	-	21	49	70	청년 농업인	네덜란드 영농기술교육센터 위탁교육
청년지식재산권도입 4차산업 실천시범	7개소	140	-	42	98	-	청년 농업인	지식재산권 도입 산업화 실천을 위한 기술이전비용
청년 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 조성	2개소	140	-	42	56	42	청년 농업인	유통협업 기반조성, 상품 및 제품개발, 모바일 농산물 유통 구축, 컨설팅 등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14개소	70	-	21	49	-	청년 농업인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모임 활동, 부모와 자녀 공동교육 등
농촌지도자회 청년 농업인 후원결연	5개소	100	-	30	70	-	청년 농업인	농촌지도자(선도농업인) 1:1결연 기반 양도, 임대 지원
청년 농업인 신성장 활동	112명	32	-	32	-	-	청년 농업인	품목별 청년 농업인 전문분야 참여형 교육 추진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300명	27	-	27	-	-	농대, 농고생	농고, 농대생 대상 농업가치 홍보, 교육 등
청년 농업인 창농스쿨	40명	20	-	20	-	-	청년 농업인	농업비전 인식, 환경분석, 사업계획 수립 교육
청년 농업인4-H회원 영농정착지원	35명	2,451	-	368	858	1,225	청년 4-H 회원	영농 생산기반, 기계구입, 시설개선 등
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14개소	70	-	21	49	-	청년 4-H 회원	4-H회원 4차산업관련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지원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 자료

한편,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식량원예과 담당)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청년농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기생을 선발하였다. 롯데슈퍼와 충남의 친환경농업 단체가 함께 사업을 구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창업과 육성 두 단계로 두고 5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부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50명 규모로 총 25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업을 시작하는 창업단계에서는 롯데슈퍼가 100% 지원(국비 100%, 1인당 4천만 원)하고 있고 경영체가 등록된 육성단계는 자부담을 포함하는 형태(국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9%)로 지원된다. 이러한 청년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마련되었다.

[표 13] 친환경청년농부사업 개요

목적	내용	상세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청년 농업인 지원. 육성단계 22명, 880백만 원(1인당 40백만 원), 창업단계 20명 지원 800백만 원	- 1인당 하우스 2동을 지을 수 있는 자금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주: 농지가 마련되어야 하우스를 지을 수 있어 엄밀히 말하면 '농지' 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9년 11월 현재 선발된 인원으로는 2020년 3기생(2019년 10월 초 결정)을 포함하여 창업 58명, 육성이 76명으로 총 134명이다. 사업을 받고 진행 중인 인원은 2018년 34명, 2019년 50명으로 총 84명이다. 매년 50명을 선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자가 발생한 상태이다. 2018년도에는 창업과 육성에서 각각 8명, 10명이 포기했다.

[표 14] 친환경청년농부사업 현황(2018~2020년)

구분	합 계(명)			2018년			2019년			2020년 선발			포기 인원
	계	창업	육성	계	창업	육성	계	창업	육성	계	창업	육성	
합계	134	58	76	34	15	19	50	23	27	50	20	30	18
천안	11	5	6	3		3	3	1	2	5	4	1	4
공주	1	0	1							1		1	
보령	3	0	3				2		2	1		1	
아산	13	10	3	4	4		7	4	3	2	2		
서산	9	2	7				3	1	2	6	1	5	
논산	21	9	12	8	3	5	7	4	3	6	2	4	10
계룡	0	0	0										
당진	2	0	2							2		2	
금산	14	3	11	2	2		4		4	8	1	7	
부여	18	5	13	8		8	6	3	3	4	2	2	2
서천	7	5	2	3	3		2		2	2	2		2
청양	1	0	1				1		1				
홍성	27	19	8	6	3	3	13	10	3	8	6	2	
예산	6	0	6				1		1	5		5	
태안	1	0	1				1		1				

자료: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내부 자료

지역별 현황으로는 현재 홍성군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논산시 21명, 부여군 18명, 금산군 14명 순이다. 권역 단위는 현재 7개로 천안시와 아산시, 홍성군(보령시, 예산군, 서산시, 당진시, 태안시, 청양군 포함), 논산시(공주시 포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산시의 경우 선발자가 급격히 늘어 따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전체 권역을 아우르는 광역법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에 설립을 추진하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년간 매년 2억 4천만 원 예산 아래 충남 친환경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 운영비로 지원한다. 세부 사항으로는 실무추진단 2명과 청년농부 활동원 2명을 선발하여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약 1억 5천만 원)가 포함되며, 사무실 확보 및 운영(약 3천만 원)에

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파머스마켓 진출과 모바일 앱 개발, 롯데납품 등 사업진행 비용과 충남청년농부 육성에 필요한 교육,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청년농부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 친환경청년농부 광역법인 지원 사업 연차별 계획



자료: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 내부 자료

2) 국내 청년 농업인 농지 정책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매우 적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를 대상으로 농지은행 농지 임대 최우선 지원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까지 농지매입 비축량을 2017년도 수준(1,000ha)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쌀전업농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쌀 외 타 작물을 재배할 시에는 임대료 8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⁹⁾. 또한 후계농 자금 및 농신보 개선으로 자금 및 담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3억 원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농지에 대한 융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표 15] 청년 농업인 농지 지원 사업

목적	내용	상세
2030세대 농지은행 농지 임대 최우선 지원 (‘18년~)	- ’22년까지 농지매입 비축량을 ’17년(1,000ha)보다 3배 이상 확대 - 쌀전업농 위주 지원 탈피, 청년농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 : (‘17년) 1,800백만 원 → (‘18년) 2,540백만 원 - 쌀 외 타 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까지 감면
후계농 자금 및 농신보 개선으로 자금담보 애로 완화 (‘18년~)	- 신규 청년창업농 농신보 보증한도상향 - 보증비율 확대 - 보증대상 요건 완화 등 우대보증 제도 개선	- 보증한도 상향(1~2억 원 → 3), 보증비율 확대(90% → 95) -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 우대(보증비율 85% → 90, 한도 개인 30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16] 귀농귀촌 분야 농지 관련 사업

목적	내용	상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농지, 주택 등 구입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2%)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 분야 종사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언급되어 제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표 17] 농지은행 관련 사업 세부 내역

목적	내용	상세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 농지 임대수탁(*05) :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위탁농지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52%)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의 6~42% 부과) - 임대위탁 요건 +대상농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온실, 버섯재배사 포함) ¹⁰⁾ +위탁수수료: (임대) 연간 임대료의 5%를 매년 부과,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¹¹⁾ +임차대상: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우선임대 +임차료: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¹²⁾
	- 농지연금(*11) :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위해 소유 농지 담보로 생활자금 매월 연금처럼 지급 ¹³⁾	- 종신행: 생존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 일정 기간 매월 지급(5, 10, 15년형)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 일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맞춤형 농지지원(*18)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① 공공임대용농지매입: 고령은퇴, 이농·전업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 안 소유농지를 매입 - 매입농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 - 매입대상자: 이농·전업 또는 고령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매입가격: 감정평가액 ¹⁴⁾ - 임대대상자: 전업농, 2030세대, 창업농, 귀농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기타 영농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등 - 임대 상한: 제한 없음. 다만,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목적	내용	상세
		<p>만 64세 이하의 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기준 5ha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까지 11,675억 원 투입, 5,083ha 농지 비축 <p>② 농지매매: 비농가,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농지를 매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농지: 진흥지역안의 논, 밭 또는 경지정리된 논, 밭 - 매도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2030세대·귀농인 등),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¹⁵⁾ <p>③ 임차임대: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 임대(5~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농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논·밭 - 임대대상자: 매도대상자와 같음¹⁶⁾ <p>④ 교환분합: 교환분합 차액,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¹⁷⁾</p>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10)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별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등은 제외.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가 금지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임대 허용(농지법 제23조)
- 11) 임대: 기존 10% 수준(8~12%)의 위탁수수료를 '14.1.1.부터 5%로 인하
- 12) 단,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
(추진실적) '05~'17년까지 110,840ha(224,705건)를 수탁받아, 196,421농가에 110,697ha를 임대(농가당 0.6ha)
- 13) 가입조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 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80%, 연금해지 : 언제든지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기타: 담보농지 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
- 14) 매입농지는 보유하면서 전업농,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
- 15) 지원조건: 연리 1%, 11~30년 균분 상환, 지원조건: 연리 1%, 11~30년 균분 상환, 지원상한 인상: 논·밭 35천원/3.3㎡(단,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은 45천원/3.3㎡)
* '15년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논 30천원/3.3㎡, 밭 35천원/3.3㎡ → 논·밭 35천원. '18년 생애첫농지취득지원 도입. 지원단가 인상: 논·밭 35천원/3.3㎡ → 논·밭 45천원(100ha) *지원조건: 무이자, 5~10년 균분 상환(관행 임차료 수준)
- 16) 지원조건: 무이자, 5~10년 균분 상환(관행 임차료 수준)
- 17) 지원조건: 연리 1%, 10년 균분 상환. '14.1.1일부터 농지규모화 사업 금리 인하(2% → 1) 적용(기존 대출자금에도 적용)

3) 농지법 한일 비교 및 농지 관련 일본 정책 동향

① 농지법 한일 비교

국내와 일본의 농지법을 제정 및 개정, 목적, 농지법 대상, 농지의 정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 농지실태조사 및 벌칙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우선 제정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내 농지법은 1949년에 농지개혁을 위해 “농지개혁법”이 마련되었다. 1972년에는 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곡자급을 위한 농지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시행되었다. 일본에서는 1952년 농지법이 마련되었다.

농지법의 목적으로는 국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소유’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지법상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목적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내 : 제1조 (목적)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국내 농업 생산의 기반인 농지가 현행 및 장래에 국민을 위한 한정된 자원으로 또한 지역의 귀중한 자원임을 감안하여 경작자 스스로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담당해 온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는 가운데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함을 규제함과 동시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작자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농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촉진하고 농지의 이용 관계를 조정하며 아울러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경작자의 지위 안정과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 공급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국내의 경우, 목적에는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발전’, ‘국토 환경 보전’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농지가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며 ‘경작자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농지의 권리가 취득’되며 ‘경작자 지위의 안정’,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 공급’ 등이 언급되어 있어 농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농지법 대상은 국내의 경우 농지로, 일본에서는 농지 혹은 채초방목지로 되어 있다. 농지의 정의에는 우리의 경우 전답, 과수원 등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포함되며 초지가 제외되는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경작 목적 토지와 우리의 초지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인으로는 국내의 경우 농업법인으로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농지소유 적정법인으로 두고 있어 농사조합법인 외에도 주식회사와 지분회사가 포함된다.

농지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우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소유권을 포함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가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¹⁸⁾에 대해 국내의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 외에는 임대, 사용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19가지 경우에는 농업위원회 허가가 필요 없도록 예외로 두고 있다.

임대차 기간은 국내의 경우 5년 이상인데 반해 일본은 50년 이내로 두고 있다.

농지의 이용승인은 국내의 경우 시구읍면장에 의한 임대차계약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농업위원회¹⁹⁾에서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농지의 이용증진을 위한 사항으로는 다시 세부로 나누는데 크게 목적으로는 국내의

18) 임대차권이란 일정한 요금(쌀 등 현물)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대차권이란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함

19) 농업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일본의 사례 연구에서 소개되었으며 제3장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경우 이용증진사업을 통해 시행자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농지의 원활한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증진과 관련한 계획으로는 국내의 경우 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나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농지 이용이 증진되도록 하고 있다. 이용증진과 관련한 심의는 국내의 경우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에서, 일본의 경우는 농업위원회에서 허가 받도록 되어 있다. 승인 주체는 국내의 경우 시구읍면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의 경우 농업위원회가 허가한다.

전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일본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위원회를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 관계 조정 항목은 국내는 없고, 일본의 경우 농업위원회가 중개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우 농지 소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한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농업위원회가 매년 1회 지역의 농지 이용 상황에 대해 조사하도록 법으로 두고 있다. 이용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소유자 대상으로 농업상 이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향조사도 농업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 설정을 받은 자는 매년 이용 상황에 대해 농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벌칙으로는 국내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금액 이하 벌금 등으로 하며 소유 관련 위반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원상 복구 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등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1억 엔(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인에 대한 농지 관련 완화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 농지법 한일 비교

	국내	일본
제정	1994년	1952년
최근 개정	2018년 12월 일부개정 (2019년 7월 1일 시행)	2015년 9월 일부개정 (2016년 4월 시행)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소유가 중심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용은 규제(강화) - 현재 및 장래에 국민을 위한 한정된 지역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 및 농지의 지역과 조화 측면 중시 - 농지권리취득촉진 및 이용관계조정 - 농업상 이용 확보 조치 강구 - 이를 통한 경작자 지위 안정과 국내 농업 생산 증대 도모 및 국민 식량 안정 공급 확보(제1조)
농지법 대상	농지(제2조)	농지 혹은 채초방목지(제2조)
농지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 등 제외²⁰⁾ -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포함(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란 경작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 ‘채초방목지’란 농지 외 토지로서, 주로 경작 또는 양축(養畜) 사업을 위한 채초 또는 가축방목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제3조)
관련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으로 두고 있음(제2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적정법인으로 두고 있음(제2조) - 농사조합법인, 주식회사, 지분회사 (농지 및 채초방목지의 소유권 및 사용 수익권에 관여하는 개인이 총의결권의 과반 이상 차지 등 조건)
농지의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두고 있음(제6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구읍면장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을 포함하여 대차권 외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통칭해서 해당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하도록 함(제2조2)
농지의 이용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소유 농지는 1) 주말·체험농장 하려는 자나 업으로 하는 자 2)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3조). 다만,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등 19가지 경우 등은 제외</p>

	국내	일본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인에게 가능(상속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이농자 소유 상한 농지) - 농업인 이외 농지소유 가능한 9가지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 등)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농지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소유 농지 -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업인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등(제32조) 	
○ 임대차 기간	5년 이상(제42조의2)	50년 이내(제19조)(민법 20년 이내)
○ 농지의 이용승인	- 시구읍면장에 의한 임대차계약확인(제24조)	농업위원회 허가(제3조) ²¹⁾
○ 농지의 이용증진 22)		
- 목적	이용증진사업을 통해 시행자에 의해 가능 ²³⁾	농지의 원활한 이용 촉진
- 관련 계획	농지이용계획 수립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및 규모확대계획, 농업외 용도 활용 계획 포함) ²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농용지이용 집적계획, 농용지이용배분계획), 농업경영 기반강화촉진법(농업경영개선계획, 청년등취농계획, 농용지이용집적계획),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등과 관련
- 심의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	농업위원회 허가
- 승인 주체	시구읍면장의 확인	농업위원회 허가
○ 전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락	시정촌장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위원회를 거쳐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도부현지사 구역 내의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내	일본
○ 이용 관계 조정		농업위원회는 이용관계 분쟁에 대해 화해중개를 함(제25조)
농지 관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소유에 관한 조사(제54조) - 농림부장관, 지사체장은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 확인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실태 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제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원회는 매년 1회 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함(제4장30조) - 이용 상황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소유자 대상으로 농업상의 이용의향조사 실시(제32조)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또는 임차권 설정을 받은 자는 매년 이용 상황에 대해 농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제3조6항)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전용,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금액 이하 벌금 등 - 소유 관련 위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등의 위반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제64조) - 법인의 경우, 1억 엔 이하의 벌금(제67조)

② 일본의 농지임차(이용권설정)와 관련한 지역 사례

(후쿠오카현 코가시 사례, 홈페이지 참조)

1) 농지의 임차(농업경영기반강화법의 의한 이용권설정)

농업경영기반강화법에 의한 ‘이용권설정’이란 빌린 농지를 설정한 기간이 종료하면

- 20)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초지법, 법률 제15265호).
- 21)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지상권, 영소작권, 질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대차권 또는 그 외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제3조).
- 22) ‘농지이용계획’ 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실제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23) 국내의 농지이용증진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통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영연초생산자협동조합 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이상인 단체)가 가능
- 24) 실제로는 용도별(농업진흥구역 혹은 보호구역) 계획 및 농업 외 활용 계획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정도에 그침

빌려준 사람인 농지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안심하고 농지의 임차 즉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농업위원회가 농가가 가진 농지임차의 의향 등(이용권설정 신청)을 바탕으로 농용지 이용집적계획을 작성하고 농업위원회총회에서 결정 후 공고한다.

2) 권리의 종류

권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가 있다.

- 일정의 요금(혹은 쌀 등 현물)을 지불하는 ‘임대차권’
-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권’

2009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소작료제도가 폐지되고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위원회가 임대료 정보를 공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쌍방의 합의로 결정된다.

3) 이용권설정의 신청

이용권설정에 의해 농지를 빌려주고 빌리기를 희망하는 자는 ‘이용권설정신청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이용권설정신청서’는 농림진흥과에서 배포
- 신청 마감 매월 25일(후쿠오카현 코가시)로 두고 있다

4) 이용권설정을 받는 요건

이용권설정을 받는 자(농지를 빌리는 자)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농용지의 전부에 대해 경작 혹은 양축 사업을 행할 것
 - 경작 또는 양축 사업에 필요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할 것
 - 이용집적계획에서 규정하는 농용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작 또는 양축 사업을 행할 것
- 참고 1) 농업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영농계획서 제출이 필요함
참고 2)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에게는 이용권설정의 기간이 종료됨을 통지해야 함

5) 농지중간관리사업(2019년도 1회 공모)에 대해

농지중간관리사업은 농지중간관리기구인 공익재단 후쿠오카현농업진흥추진기구가 농용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농지의 중간적인 인수자로서 농지의 임대희망자로부터 농지를 빌려 받아 중심적 농업인력에게 농지를 집적해주고 있다.

농지를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다음의 내용에 충족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대상
- 농지 상황에 따라 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중간관리사업에 의해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현)의 지원이 있음

참고) 중간관리사업에 의해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지원

- ① 지역집적협력금(국고사업): 지역의 합의에 따라 사람농지플랜 작성 지역 내의 모든 농지의 20% 이상의 면적을 기구에 임대한 지역에 대해 지원
- ② 경영전환협력금(국고사업): 기구에 농지(경작지)를 10년 이상 임대하는 농업자 등 (은퇴 농업자, 농업 부문의 감소에 의해 경영전환하는 농업자 등)에 대해 지원

농지를 빌리고 싶은 사람은 다음의 내용에 충족해야 한다.

- 후쿠오카현농업진흥추진기구가 정기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농지를 빌리고 싶은 자를 모집하고 있음
- 2019년도 제1차 공모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③ 일본의 농지 관련 최근 정책 동향

1) 농지의 이용집적을 위한 시책(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개정) 강화

기존의 농지보유합리화사업에서는 농지를 내놓은 사람이 안심하고 농지를 팔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며, 농지가 영농후계자에게 집적될 수 있도록 제3자적 기관 개입으로 집적을

유도해 왔다.

여기에 농지의 이용집적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을 통해 농지 보유 리스크를 피하면서 지역 내 농지를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농업후계자에게 재배분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집락 단계에서 집적이 이루어지도록 코디네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시정촌 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이용집적원활화 단체로는 시정촌, 시정촌농업공사, 농업협동조합, 토지개량구, 지역후계자협의회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지역의 단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하여 도도부현 단계의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기본방침을 세우고, 방침에 근거하여 시정촌 단계의 기본구상을 세우고 농업경영기반촉진사업 실시
- 인정농업자제도(시정촌에 의한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 5년 후 경영개선목표를 기재한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시정촌이 인정
- 인정신규취농자제도(청년 등 취농계획): 경영개시후 5년 후 경영 목표
- 농업경영기반촉진사업
- 이용권설정 등 촉진사업: 농업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연계로 농용지 권리이동 원활화 (시정촌이 농용지의 권리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용지이용집적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이용권 설정 등 효과 발생)
-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농지이용집적원활화 단체(시정촌, 농협, 공사 등)가 위임, 대리에 의한 시스템으로 농용지의 이용조정을 실시
- 농용지이용개선사업: 농용지이용개선 단체가 농용지이용규정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인정농업자 등의 인력에게 농지를 집적하고 육성, 확보 추진
- 농작업수위탁촉진사업 등: 위탁에 필요한 지도, 육성, 확보를 위한 조건 정비 등 추진
- 농업위원회에 의한 이용조정 추진: 이용권 설정 촉진사업
-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 등 실시: 농지매매등사업, 농지 매도신탁, 농지소유적격화법인에 현물출자 등

2)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 배경 및 필요성

2014년 농지중간관리기구 사업 개시 이후, 중심적 농업인력의 이용면적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운

지역의 협의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및 중심적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농지의 집적 및 집약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법률안의 개요

지역 농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연령별 구성 및 후계자 확보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위원회 역할을 명확화하는 등 지역의 농업자에 의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지중간관리기구 시스템 간편화, 농지 집약 및 집약화 지원 체계 일체화, 청년 등 중심적 농업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구분된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지역의 농업자 등에 의한 협의의 장의 실질화(중간관리법의 개정) 지역협약에 관해서 농지에 관한 지도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연령별 구성이나 후계자 확보 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농업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화한다 중간관리법제26조2항 및 3항
2.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시스템 개선(중간관리법의 개정) 가. 기구에 의한 농지의 차입, 전대에 관해 현행 두 가지 계획(시정촌 집적계획과 기구의 배분계획)이 필요했지만 시정촌 집적계획으로만 일괄적으로 권리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창설한다 중간관리법제19조2 나. 기구의 배분계획의 종람(縱覽) ²⁵⁾ 을 폐지한다 중간관리법제18조3 다. 농지의 수취자에 대한 이용상황보고 의무를 폐지한다 중간관리법제21조3
3. 농지의 집적 및 집약화를 지원하는 체제의 일체화(중간관리법, 기반강화법의 개정) 농지이용집적원활화 사업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 다음 중간관리사업의 통합일체 한다 가. 기구가 배분계획안의 작성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농지 이용 촉진을 하면서 시정촌이 지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실적이 있는 원활화단체가 배분계획 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중간관리법제19조 나. 기구의 사업실시구역을 원활화사업과 동일하게 '시가화구역이외의 구역'으로 확대한다 중간관리법제2조3항 다. 기구의 원활화단체의 계약관계를 쉬운 수속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법부칙제4조
라. 통합일체화 관계의 개정사항(가를 제외)의 실시 기일을 공표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로 하고 충분한 이행 기간을 둔다(원칙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법부칙제1조
4. 중심적 인력의 확보 등(기반강화법, 농지법 개정)	
(1) 인정농업자제도에 관한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가. 중심적 인력 활동 범위에 관해 시정촌 인정사무를 도도부현 또는 국가가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기반강화법제13조2
나. 임원의 그룹 회사 간 겸업 등 농업경영상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정농업자인 농지소유적정법인에 대해 임원의 상시종사요건을 완화한다.	기반강화법제13조2
(2) 청년 등 취업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2년 이내에서 17년 이내로 연장한다	기반강화법제14조7
(3) 농용지이용규정에서 이용권 설정 등을 받는 자를 인정농업자 혹은 기구에 한정함으로써 농용지 이용 집적 및 집약화를 촉진하는 구조를 만든다	기반강화법제23조2
(4) 농지 집적 및 집약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 전용 불허가요건으로서 지역의 중심적 농업인력에 대한 농지 집적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한다	농지법 제4조6항 및 제5조2항

3) 농업위원회 제도의 개정

○ 배경 및 목적

농업위원회는 기존의 주요 임무인 중심적 농업인의 농지 등의 이용 집적 및 집약화, 유휴농지의 발생방지 및 해소, 신규취농촉진 등 농지 등의 이용 최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1951년법률제88호, 이하 농업위원회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농업위원회개혁을 통해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 농업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25)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가옥의 가격과 구내의 다른 토지나 가옥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신의 토지나 가옥의 평가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제도

농업위원회법의 목적은 농업생산력 증진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농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농업위원회네트워크기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농업위원회법 제1조).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회법에 따라 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통해 도도현부를 거쳐 교부하고 있다. 농림부대신은 교부와 관련해 농업위원회의 수, 농업인의 수, 농지 면적을 기초로 하고, 농지 등의 이용 관계 조정 상황 및 농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농업위원회법 제2조).

시정촌 단위에서 설치되며 농지면적이 넓은 지역은 2개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 농지법 외 4가지 법률에서 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농지 등 이용최적화 추진에 관한 추진 목표 및 방법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

농업위원회네트워크기구는 동법 제42조에 의해 농업위원회 상호 연락 조정, 정보 공유에 의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해 농업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에 의해 전국 또는 도도부현에서 각각 1개씩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농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며 농업경영자에 대한 관계, 농업위원회의 소개 및 지원, 법인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 규정에 따라 농수산성장관의 인가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농업위원회 개정의 주요 내용

우선 농업위원회 사무의 중점화를 들 수 있다. 농지 등 이용최적화추진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임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 19] 농업위원회 개정 세부 내용

개혁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농업위원회 사무의 중점화	필수 사무	1. 농지법등에 의해 권한으로서 속하게 된 항목	1. 농지법등에 의해 권한으로서 속하게 된 항목 2. 농지등 이용최적화추진 (중심적 인력의 농지이용집적·집약화, 유희농지 발생방지·해소, 신규참여촉진)
	임의	2. 중심적 인력의 농지집적·집약화,	

	사무	유휴농지 발생방지·해소	
		3. 법인화 외 농업경영 합리화	3. 법인화 외 농업경영 합리화
		4. 농업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정보제공
		5. 농업 및 농민에 관한 정보제공	
		6. 농업 및 농민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공표, 행정청 건의 및 자문에 대한 답신	[농지이용최적화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PDCA(계획/실행/평가/개선)를 통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시책 개선 의견을 제출해야만 한다]
농업위원 선출방법 변경	선거제와 시정촌장의 선임제(의회·단체추진) 병용 [실제로 선거는 10% 정도이며, 겸업가능 선거위원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시정촌장 임명제로 일체화 - 원칙적으로 과반은 인정농업자로 하고 농업인 이외의 자에서 중립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이상 넣음 - 여성 및 청년도 적극 등용 - 농업위원 정수는 위원회를 기동력 있는 개최를 위해 현행 절반 수준 개편 	
농지이용최적화 추진위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원이 각각 둘 다 실시 (1) 농지의 권리이동의 허가 등 '합의체로서 결정행위'와 (2) 중심적 인력으로서 농지이용의 집적·집약화, 유휴농지의 발생방지·해소 등을 위한 '지역 현장활동' (2) 현장활동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유휴농지가 늘어나거나 농업인력으로의 농지이용 집적·집약화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합의체로서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농업위원과는 별도로 현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을 설치 - 농업위원과 추진위원은 밀접하게 연계 - 추진위원은 자신의 담당 구역에서 중심적 농업인력에게 농지 이용의 집적·집약화, 유휴농지의 발생 방지·해소 등 지역의 현장활동을 실시 - 추진위원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주: 농업위원회 사무의 중점화와 관련하여 개정 전 2번 사항이 임의사무에서 필수사무로 강화되었으며, 6번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행할 수 있도록 법령사무에서 삭제

다음으로 농업위원 선출방법이 변경되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중심적 인력이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쳐 확실히 취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1) 공선제(선거제) 폐지, (2) 시정촌장이 시정촌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법으로 개정, (3) 그 경우, 농업위원 과반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농업자여야 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 즉 농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의 신설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주 합의체로서

의사결정을 행하는 농업위원회는 별도로 해당구역의 농지 등 이용최적화추진을 위한 현장활동을 하는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을 신설하여 농지 관련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농업위원회 지원 조직으로서 도도부현농업회의 및 전국농업회의소에서 농업위원회네트워크기구 기능을 강화하였다. 도도부현지사 또는 농림수산대신이 농업위원회네트워크기구(일반사단법인)로서 지정하고 있다.

개정과 함께 강화된 역할인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의 구체적 업무로는 첫째, 사람·농지 플랜 등 지역의 농업인 등과 논의 추진, 둘째, 농지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게 농지이용의 집적·집약화 추진, 셋째, 유휴농지 발생 방지와 해소 추진,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농지중간관리기구와 밀접하게 연계 및 제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20] 농업위원회 정수

구분		개정 후 상한	개정 전 상한
1.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위원회 (1) 농업인 수가 1,100명 이하의 농업위원회	추진위원을 위촉하는 농업위원회	14명	20명
	(2) 농지면적이 1,300ha 이하의 농업위원회	27명	
2. 1 및 3 이외의 농업위원회	추진위원을 위촉하는 농업위원회	19명	30명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농업위원회	37명	
3. 농업인 수가 6,000명을 넘고 동시에 농지면적이 5,000ha가 넘는 농업위원회	추진위원을 위촉하는 농업위원회	24명	40명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농업위원회	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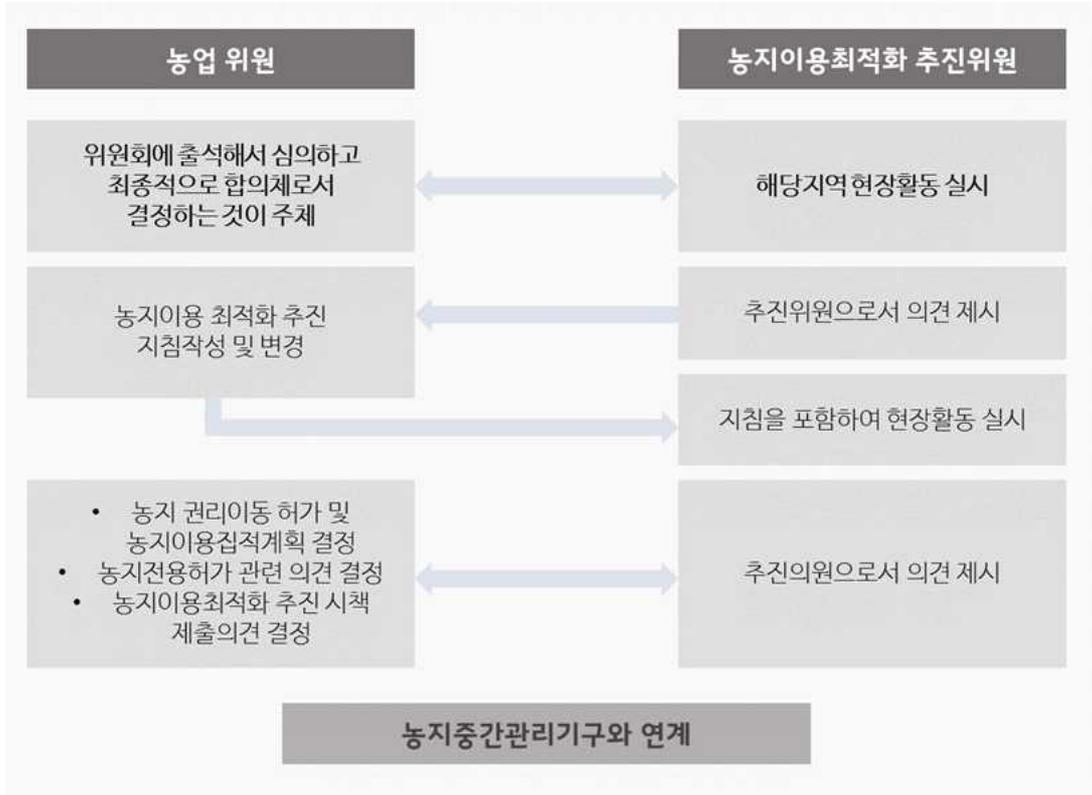
주: 개정 전 상한의 경우 선거위원 정수이며, 그 외에 선임위원이 7명 정도이며 지금까지의 선임위원수가 7명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한을 올리는 것이 가능함

이를 위해 시정촌장이 조례로 정하는 농업위원의 정수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추진위원을 위촉하는 농업위원회는 총회를 기동성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현행 정수의 절반 정도로 두고 있다.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농업위원회는 농업위원이 추진위원의

기능(현장활동)도 겹하기 때문에 현행 정수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추진위원의 경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의 상한 기준으로는 농지이용 최적화추진을 위한 현장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농업위원회 구역 내 농지면적의 100ha에 한 명 비율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2] 농업위원회 내 농업위원과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의 관계



출처: 농림수산성, 농업위원회법개정에 대해(2016. 4)

농업위원회가 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정촌으로는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이러한 시정촌에서도 재량에 따라 추진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우선 유희농지가 거의 없고 중심적 농업인력의 농지 집적이 상당히 진행된 시정촌, 다음으로 농업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는 시정촌(구역 내의 농지면적이 도도부현 200ha, 홋카이도 800ha를 넘지 않는 시정촌)이다.

농업위원과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은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농업위원회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현장활동을 담당하는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을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21] 도도부현 농업회의 및 전국농업회의소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인가법인으로서 행정혁신상, 법령업무확충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원회 지원업무를 실시하는 지정법인 (도도부현 지정)으로 이행 - 농업위원회 지원업무 외, 신규참가지원이나 중심적 농업인력 조직화·운영 지원 등 업무를 법령 업무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
<p>도도부현농업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조사, 연구, 연수 - 농업위원회에 대한 협력 - 농지전용허가에 관해 도도부현에 의견 제출 등 - 의견 공개, 행정청에 건의 등 	<p>도도부현농업위원회 네트워크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위원회 상호 연락 조정, 우수한 대응을 하고 있는 농업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농업위원 등 강습 및 연수, 기타 농업위원회에 대한 지원 - 농지정보의 수집, 정리, 제공 - 신규진입지원, 법인화추진, 담당자의 조직화·운영지원(추가) - 조사 및 정보의 제공 -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해 농업위원회의 의견 제출 등
<p>전국농업회의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 농업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연락 - 조사 및 연구 - 의견 공개, 행정청에 건의 등 	<p>전국농업위원회 네트워크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 기구 상호 연락 조정, 도도부현 기구가 실시하는 농업위원 등 강습 및 연수협력, 도도부현기구 지원 - 도도부현 기구 ②~④의 업무

④ 신규취농자 농지취득 지역 사례

○ 농지법 개정과 신규취농자를 위한 농지 취득의 의미

2009년 6월 개정(12월 실시)된 농지제도 개정의 주요 골자는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을 규제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작자가 지역과의 조화를 배려한 농지 이용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농지제도 개정에서는 농지의 농외 이용을 강하게 규제함과 동시에 농지 권리

(소유권 및 임차권)를 가지는 자에 대해 ‘농지를 적정하고도 효율적 이용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무(농지법제1조2)’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농지 권리를 가진 자의 책무를 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임차 등에 의한 농지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종래의 농업인의 농지 집약 및 확대 등을 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제조건부 농지대차’나 ‘농지법의 농지권리이동의 하한 면적 요건의 탄력화 등’을 만들어 기업이나 농가 자녀 이외의 개인(신규취농자) 등에 대해 농지의 권리 취득을 인정하고, 다양한 주체가 농업에 신규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대차 등에 의한 농지이용촉진에서는 ‘농업위원회의 적절한 사무 집행(적정한 이용의 확인·지역조화 요건의 확인 등)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농업과 농업 외)에 의한 농업신규진입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농지 제도가 기업의 농업 진입이나 신규 취농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농지제도를 바탕으로 농지의 권리 이동이나 농지의 황폐 방지책 등을 실시하는 농업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신규 참여의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규취농자나 기업의 농업 참가에 의한 농업에의 신규 참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신규취농자의 농지취득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전국농업회의소, 2012년 3월)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신규 참여와 관련한 농업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신규 참여가 계속적으로 영농 하는데 필요한 지원 조치 및 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농업위원회에 의한 신규 취농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미나미아시가라시, 사바에시, 하마마츠시 3곳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① 농지 권리 이동의 하한 면적 이하의 농지대차, ② 신규 취농 희망자의 영농 계획의 작성·제출 요구, ③ 지역농업위원회에 따른 농지 알선과 농업 내용 지도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신규 취업자는 취농 직후 농지 권리 이동의 하한 면적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하한 면적 이상의 농지에서의 영농 개시가 어려운 점, 또한 농업위원회에 영농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신규 취업자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품목이나 농법에 대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위원회가 신규 취농 지원부터 농지 알선뿐 아니라 계속 영농을 위해 농업경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한 면적 이하에서의 신규 취농 기준의 설정은 지역 농업을 유지하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육성만이 아니라 지역 농지를 적절히 이용하는 중심적 인력의 육성을 위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농지 대출 및 시민 농원 등보다 규모가 크며(미나미아시가라시·사바에 시에서는 3a~10a미만), 정년 귀농 등을 통한 지역 농지 이용의 확대가 목표라고 하겠다.

○ 신규 취농자 지원에 대한 농업위원회의 지원 노력과 과제

신규 취업 영농인 및 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한 농업위원회의 지원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농지 알선은 행정의 경작포기지 해소사업 등 활용이나 농업위원이 가진 지역의 빈 농지 정보를 통해 신규 취업자나 농업 참여 기업에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적절한 농작물·농법 지도는 지역의 농업에 정통한 농업위원이 지역 JA(농협)의 생산부회 등에 소개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각 사례를 보면, 농지의 알선 등은 농업위원에 의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작포기지에 관한 정보나 지역 내 빈 농지 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에 밀착한 농업위원 및 농업위원회 사무국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향후 과제가 되는 것은 신규 참여를 실시하는 신규 취농자나 농업 참여 기업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영농(농업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나미아시가라시는 농업위원회의 사무국 직원과 농업위원, 지역의 인정농업자에 의한 농업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하마마츠시에서는 현지 JA의 생산부회 등을 통한 지원과 향후 농법·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전체의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 미나미아시가라시 농업위원회 사례: 새로운 지역 농업 담당자 육성과 지역 농업 진흥

미나미아시가라시의 신규 농업 진출 시스템은 신규 취농 기준으로 시민 농업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미나미아시가라시 농업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농업 경영체의 육성 및 지역의 경작 포기지의 활용을 목표로 ‘미나미아시가라시 신규 취농 기준’, ‘시민농업인제’, ‘시민농원제도’를 추진 중이다.

‘미나미아시가라시 신규 취농 기준’은 새로운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로써 자립할 수 있는 신규 취농자(법인 포함) 등 새로운 농업인력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 및 시행 기간을 설정하고 농업위원회에 의한 면접 등을 통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²⁶⁾. 기준 및 신청으로는 ‘취업영농’이 되기 위한 1년간의 계도 기간 및 시행 기간 종료 후에 ‘취업영농인’이 되기 위해 정식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취농 희망자는 ‘취농계획’을 작성하고 시 농업위원회에 제출
- ② 나이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시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할 것
- ③ ‘취농계획’에는 농업 시작 시기, 지역, 어떤 농업 경영 유형을 목표로 하는지 등의 목표 설정이나 예상 소득 목표를 명기
- ④ 희망자는 농업위원회 사무국(취농 관련 상담과 동시에 취업영농 희망 지역의 농업 위원과 조율하고 시행 기간용 이용권 설정 등(1년간 10a이상)에 관한 신청서 (지구 담당 농업위원의 취업영농계획 내용 확인서도 첨부)를 농업위원회에 제출
- ⑤ 연간 소득 목표는 취업 영농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의 기본 구상에서 정한 연간 소득 목표의 35% 이상(주된 농업 종사자: 6,000만 원/명, 개별 경영체 7,000만 원/경영체)일 것
- ⑥ 연간 노동 일수는 150일 이상인 가구 근로 일수에 대해서도 150일 이상(배우자의 근로 시간 포함)으로 두고 있으며 1년간의 계도 기간 종료 후에 ‘취업영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신청을 농업위원회에 해야 함
 - ‘취농계획(시행기간용)’ 제출 후 1년을 경과했을 때 ‘신규 취업영농인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업위원회에 신청할 것(지구 담당의 농업위원의 의견이 첨부된 ‘취농계획이행확인서’ 첨부 필요)
 - 농업위원회 정기 총회에서 신청 승인 후 ‘신규 취업영농인 인정서’가 교부되면 정식 농가로 농업을 시작할 수 있음
 - 취업영농인은 새롭게 이용권 설정 등에 관한 제안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하고 농업경영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능

26) 참고로 신규 취농희망자에 대한 심사는 농업위원회 사무국뿐만 아니라 월 1회 하고 있는 농업위원회를 통해 신규 취농희망자(개인·법인 등)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시민농업인제도는 정년 퇴직자 등의 지역 농업의 중심적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민농업인제도’는 시의 새로운 인력 확보 안에서 ‘시 신규 취농 기준’과는 달리 보다 다양한 농업 인력의 확보를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3a이상 10a미만의 농지를 모두 경작 상시 종사하지 않거나 효율적 이용을 하는 자립적 농업을 지향하지 않은 자’에 대한 농지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 이용권 설정은 3년 미만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시민농업인제도’에서 3년간 경작 경험을 쌓고 시 농업위원회에 신청하면 ‘취농희망자’가 될 수 있다. 정년귀농자 등에 대한 농지 대출로 설정되어 있으나 젊은 연령층(20~40대) 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 사바에서 신규 취농 지원 제도

사바에서는 2010년부터 ‘신규 취농 촉진 지원 시스템(이하 사바시스템)’을 시작했다. 자립할 수 있는 농업인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바에서 신규 취농 시스템’과 여가를 이용한 농민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바에서 시민 취농 시스템’의 2가지로 구분된다. 사업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농지 소유 면적이 10a 미만인 자
- ② 20세 이상 70세 미만이고, 시내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자 이면서 다음 중 한 사람
 - 농업수익의 안정 및 확대에 의해 자립한 농업경영을 행하고자 하는 자
 - 여가 등 빈 시간을 활용해 농업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취농하는 자

이러한 사바시스템의 핵심은 농업경영기반강화법에 의거하여 대체로 10a 이상의 농지에서 이용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다²⁷⁾. 심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 기간 중 취업 영농 계획과 농용지이용집적계획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출
- 2년간의 제도 기간

27) 보고서에 따르면, 담당자가 제도 검토 단계에서 농지법 3조에 따르는 것도 고려했으나, 3조에서 인가한 경우에 "전용불가, 농지를 황폐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농정국에서 판단, 농업경영기반 강화법을 따르기로 함. 농업경영기반강화법에서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는 농정국의 견해가 있어 시의 농업진흥 계획에서 기본방향을 명기하고, 현에서는 "충분히 주의하고 집행하도록"이라는 주문을 조건으로 승인됨.

- 농가조합 및 토지개량구 관계자들과의 지역 결정 준수 합의
- 1년 후 계획 갱신(농가조합장과 농업위원의 의견 첨부) 등

실제로 사바에시스템이 도입되고 2년이 경과한 후 문의를 25건 정도 있었고, 텃밭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전혀 농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의 참여도 많아 시에서는 시민농원사업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사업 대상은 그동안 4명으로 2012년에 추가 1명(예정)이 있었으며 이미 농업을 시작한 4명은 모두 채소를 재배하고 경영 규모로는 2명은 10a 이상, 2명은 10a 이하였다. 취농 예정자를 포함하는 5명의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 A씨(58세): 자영업 텃밭에서 농업으로 확대 희망
- B씨(58세 전후): 회사 근무, 비농가, 60세로 퇴직한 후 본격적으로 농업으로 진입 희망
- C씨(63세 전후): 자영업, 비농가, 하우스 농업
- D씨(49세): 자기 밭도 조금 가지고 있지만 규모 확대를 희망
- E씨(30대 후반): 취농 예정자로 자영업과 함께 농업 진출을 희망

3. 시사점

농업 부문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의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수 및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에서 전국 수준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청년 농업인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국가 단위는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충남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은 매년 50명 수준의 청년을 5년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히 친환경농업 실천 청년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영농의 기본이 되는 농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 라는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지원 규모나 여건이 좋지 못하다. 그 배경에는 ‘소유’에 집중해 있는 농지법이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국내와 일본의 농지법 비교 및 일본 정책 동향 정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일 농지법 비교에서는 농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농지의 ‘이용과 활용’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또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단위 논의 체계 기반으로 농지와 관련한 이용증진 및 각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은 농지와 관련한 근래의 정책 동향이 모두 ‘이용’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용집적 강화와 농지중간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정비가 마련되어 있었고, 기존의 농업위원회 제도 재정비를 통해 실제 지역 단위에서 농지이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위원을 두는 등 이용증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의 지원과 동시에 지역 단위에서는 신규로 지역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농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제도 개선 검토와 더불어 지역 단위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가운데 지역 특색을 살려가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조사

1. 청년 농업인 심층 면담 조사

1) 심층 면담 조사 개요

여기에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접근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심층 면담 대상자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별로 처해 있는 농지와 관련한 실정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충남에서 실시 중인 친환경청년농부 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룹 면담이 진행된 곳도 있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은 지역별로 청년 농업인 권역 대표를 두고 있는데 권역은 현재 7개로 천안과 아산, 홍성(예산, 서산, 보령, 청양 포함), 논산(공주 포함), 금산, 부여, 서천으로 구분되어 있다(제3장 참조).

조사 기간은 11월 14일부터 시작하여 11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해당 청년 농업인 당 1~2시간에 걸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는 농사와 관련한 일반 현황과 농지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 22] 청년 농업인 심층 면담 대상자 개요

이름	연령	영농시기
A	35	2011
B, C, D	34, 33, 31	2017
E	39	2016
F	37	2017
G	40	2011
H, I	38, 38	2017, 2017
J	39	2017
K	39	2014

2) 심층 면담 조사 결과: 일반 현황

(1) 면담자: A씨

영농의 계기

27살에 고향으로 돌아온 A씨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것을 계기로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와 올해 8년차를 맞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논 농사며 하우스며 부모님을 도와드려 왔다. 처음에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으나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가 2009년부터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짓기를 결심하게 된다.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농사일에 뛰어드는 것에 반대는 있었지만 아버지는 좋아하셨다고 한다. 평소에도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쫓 해 오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친환경농업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고 농업에 대한 기대가 앞섰던 것 같다.

영농 현황

현재 농사는 부모님과 함께 유기 벼를 재배하고 있고, 시설 하우스에서 사과, 대추, 애호박, 당근, 대파, 양파 등을 재배하고 있다. 유기 벼는 직거래를 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잡곡 농사도 하고 있는데 관행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시설 하우스 품목은 친환경 농법을 하지 않았는데 지역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한 판로가 안정적으로 마련되는 것을 보면서 점차 무농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판매처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향후 모든 품목을 친환경농업으로 할 예정이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지역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사무국장 일을 2016년 1월부터 하고 있던 차에 친환경 청년농부사업을 접하게 되었다. 주변에 다양한 지인과 함께하고 있다. 2017년 7월 1기로

참여해 오고 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사업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고 2기로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창업인데 이미 정착을 위해 농지를 매매한 경우가 많다. 1기 가운데 창업에 지원했다가 농사에 투자할 여건이 안 되서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도 있다. 2기는 올해 사업자가 되었지만 하우스 설치가 이제 완료되어 시작하는 단계이다. 하우스 작업은 해당 연도에 완료되도록 도에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의 힘든 점

농사를 짓는 게 쉽지만은 않다. 기본적으로 벼를 재배했을 때는 집중 기간이 한두 달 정도로 모내기 시즌에 신경 써주면 잡초를 제거하는 날짜 조절이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진행하면서 우렁이를 넣은 후에 물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은 않았다. 흙이 보이지 않게 물높이를 꾸준히 지켜줘야 우렁이가 풀을 먹기 때문이다. 은거지(논두렁에 사는 물고기) 개체수가 늘어나 논두렁에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눈에 물이 빠지는 일이 허다했다.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병이 오기도 했다.

농사기술은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접목이 가능했다. 하지만 농고나 농대를 나온 사람들은 기본기가 충실한 것 같아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농사 공부를 해야겠다 싶지만 일이 힘들어 선뜻 시간을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진행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10~20% 수준인 것 같다. 각각의 농사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접근이 쉽지는 않다.

농사지으면서 가장 힘든 일은 부모와의 갈등을 꼽을 수 있다. 몸이 힘든 것은 괜찮지만 함께 농사를 짓다 보면 부모님과 관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쉽지가 않다. 열심히 해도 아들 하는 일이 썩 맘에 들지는 않는 눈치다. 거기에 아직 젊으신 아버지는 본인이 직접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편이기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선도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서 아들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

지원 사업

A씨의 경우는 외지에서 학교 다니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귀농 혜택을 보지 못했다. 청년농부사업으로 하우스 4동을 지은 상태다.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으로 오면서 처음 4년간은 집에서 농사만 짓고 나머지 4년은 연합회 활동으로 현재 본인의 농사일에는 소홀해져 있는 상태라서 다시 농사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역의 청년들

주변에 농사짓겠다고 내려온 청년들은 부쩍 늘었다. 주변에만 100여 명이 있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200여 명은 되는 것 같다. 사회 생활하기도 마땅치 않고 부모의 요청에 의해 돌아오는 후계농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신에 기반 없이 새롭게 농사를 짓고자 내려온 청년의 수는 해당 지역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역 차원에서 청년들이 주가 되어 2040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활발하다가 지금은 활동이 주춤하다. 아직 지역 청년들의 전체 모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H 회원들도 많지만 이미 규모화 되어 있는 등 결이 다른 것 같아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

농업에 대한 기대

새로운 곳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농업기술센터나 행정기관에도 가끔 텃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골에 왔으면 마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반응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내려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사짓는 청년들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앞으로 고령화로 남아도는 농지는 늘어나는 것에 반해 물려받으려는 사람은 더욱 줄게 될 것이다. 지금은 대농들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향후 새롭게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나 소농들에게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부모님이 농사지어 온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힘든 모습만 기억하고 농사짓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사에는 다양한 재미가 있다.

“농사 기술 하나만 배워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물론 농사일은 부모님과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안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하나 늘려가는 재미도 있어요.”

현재 주로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직거래는 원하는 가격을 받고 안정적으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판매를 직접 해 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역량이 쌓여가기도 한다. 300가구 정도에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부로 판매하고 있다.

“얼마 전에 연평도에 아는 분 소개를 받아서 보내니깐 좋은 쌀을 보내서 고맙다고 해산물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구요.”

가끔 블랙컨슈머가 등장하기도 하여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발판을 만드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본인의 영역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다.

청년농부법인과 새로운 도전

친환경청년농부는 이제 3기까지 50명 늘어서 145명의 인원이 있지만 실제 청년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현재 롯데로 들어가는 판매량의 경우는 단가 협상에서부터 좋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슈퍼와 롯데마트는 같은 계열사지만 다른 회사여서 납품이 쉽지 않다. 롯데 측에서도 1기 때 농산물 생산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친환경 청년농부에 대해 안정적인 생산처로서 기대가 줄어들기도 했다.

롯데와는 안정적인 판로도 쉽지 않아 각 지역별로 판매처를 각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환에서 최근 청년농부법인이 만들어졌고 청년농부법인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DDP(동대문플라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얼굴있는 농부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장터를 통해 만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현재 청년농부법인과 연계하여 천안에서 시범적으로 장터를 열 계획이다. DDP측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도록 공간을 섭외하는 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천안의 중고물류센터를 알아봐 주고 있다. 용인에서도 청년이 주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한다. 용인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는데 주 고객층이 생겨 자주 열자는 요청이 있다.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떡거리 등 다양한 팀들이 함께 이벤트를 열고 있다. 2019년 11월 28일 천안 농부 시장에서는 충남에서 10개 팀 정도가 모여 DDP측에서도 다양한 팀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2) 면담자: B, C, D씨

영농의 계기

2017년 귀농투어를 계기로 현재 정착한 지역의 블루베리 작목반 농민들을 알게 되어 귀농에 관한 정보를 습득해 오던 차에 지역 분들이 농지를 양도하고 기술도 알려주고 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정착 전에 타 지역에서 만나 귀농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으나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현재 3명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노동력이나 자금 문제 등으로 합치게 되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도 3명이 그룹으로 신청하여 2기로 선정되었다.

2018년 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교육을 받았는데 받을 당시 이미 지역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었고 땅을 깎고 집 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집이 없어 월세 생활도 하고 귀농인의 집에서 3개월 정도 지내기도 하였으며 마을의 제실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농장을 지금의 지역에 마련하고 나니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 동네에 산을 구입하고 산을 깎아 집을 짓게 되었다.

B씨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골에 대한 향수 때문에, C씨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D씨는 자신에게 할애할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 때문에 농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저는 먹거리 때문에...중국에서 먹는 거에 납 성분이 발견되는 걸 보고 내가 먹을 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대한 향수가 있어 빨리 오고 싶었지만 못 내려와서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에 들어가서 어떤 농사를 지을지 배워 보고자 3년 정도 일할 때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죠.”(B씨)

“저는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이나 생태 쪽 공부를 하다가 그게 친환경농업으로 바뀌면서 하게 되었죠.”(C씨)

“저는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먹고 자고 하면서...오면서 좋은 점은 저한테 할애할 시간이 많아서 농사를 짓기로 했죠.”(D씨)

영농 현황

해당 지역은 블루베리 생산이 많아 지역의 작목반의 경우에도 노지 작목반에만 30~4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우스 블루베리 작목반은 규모가 매우 크다. 예전에 수박을 대단지로 하다가 대부분의 농가들이 블루베리로 작목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우스 블루베리는 재배 시기가 빨라 백화점 납품도 하고 있다. 노지와 하우스는 품종이 다른데 북부 종은 월동이 가능하고 남부 종은 월동이 안 된다. 남부 종은 하우스에서 키우면서 초봄에 생산물이 나오고, 노지는 그 다음 시기인 6~7월에 수확이 가능하다. 이른 시기에 수확이 되는 하우스 생산이 가격 면에서 5~10배 정도 가격이 좋지만 대신 가운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하우스에서는 허브를 생산하고 노지에서는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

산 2천 600백 평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임야이고 그중에 블루베리 500평과 나머지는 포도와 매실을 함께 재배하고 있다. 자두로 바뀌나갈 계획이다. 임야는 구입한 것이고 하우스 농지는 임대했다. 900평 농지에 하우스 시설(400평)만 본인들이 지었고 농지는 10년 간 임대했다. 1년에 100만 원의 임대비를 지불하고 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은 2017년에 1기로 선정되어서 2018년도에 사업을 받고 올해 시작한 단계이다. 2018년도 가을 말쯤에 하우스가 완공되고 수확까지는 아니지만 연습 삼아 겨울에 시험을 해보고,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짓기 시작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 가운데 포기한 인원도 좀 되는데 시설 자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떠난 경우도 있고 부모님과 갈등으로 그만둔 경우도 있다. 올해 3기 사업대상자의 경우는 땅을 이미 확보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된 상태다.

지역의 청년들

지역에는 청년들이 있는 편이지만 교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새롭게 내려온 청년이 1명이고 대부분은 승계농으로 내려온 경우이다. 밭작물을 하는 청년은 거의 없고 축산이나 벼 수도작이 가장 많다.

마을에는 총 19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역 분들과 관계는 좋은 편이다. 현재 마을

반장과 새마을 지도자, 의무소방대, 마을 청년회 총무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블루베리는 작목반으로 판매하고 있고, 허브는 도매로 전량 흥성으로 나가거나 직거래를 하고 있다.

농업의 어려운 점

C씨는 귀농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집을 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D씨는 문화생활이 힘든 점을 들었다. 인근 대도시로 나가보기도 했지만 들어올 때 마을버스가 없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B씨는 행정적인 문제가 불편함을 들었다. 필요한 서류와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설계와 관련해서 지자체에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야 하기도 하며 더군다나 진행이 느린 점을 꼽았다.

“저희가 과수원 토목설계를 하는데 작업료를 내고 관정을 개발하고 산을 깎아서 재배사 허락 등을 받았는데 어느 누구도 결재 라인이 정해진 게 없는 거 같아요. 각각 5개 부처에 받았는데 결재라인이 바뀌어서 2달 정도를 허비했어요.”

결국은 설계받는 데에만 1년이 걸려서 2017년에 오자마자 설계를 시작했는데 2018년에야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행정업무 때문에 1년이 미루어진 셈이다.

주거 문제도 힘들기는 하다. 빈집 수리는 집주인이 다시 돌려달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악용을 막는 범위에서 농막 제한 등을 완화하여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한적인 허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3) 면담자: E씨

영농의 계기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E씨는 졸업 후 종자 관련 회사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다. 네덜란드와 국내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왔고 계속해서 농업 쪽으로 공부하고 관련된 일을 해왔다. 농사짓는 작물을 실제로 보려고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연구소와 영업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향후 종자를 얼마나 생산할지 기획하는 일이었다. 현장과 밀접히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기 어려운 사정을 겪고서 직접 농사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2016년 4월에 귀농을 하게 되었다.

영농 현황

현재 1,500평 규모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귀농 초기에는 토경 딸기와 멜론을 재배했다. 그러다가 지역 활동이 잦아지면서 농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자 손이 덜 가는 블루베리로 올해 전환하게 되었다. 블루베리는 수확 시기에만 바쁘고 나머지는 시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작목이다.

현재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는 단계라 수확량이 많지는 않아서 지인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공선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직거래를 늘려갈 계획이다.

농업의 힘든 점

귀농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농지 문제였다. 귀농을 결정할 당시는 귀농 붐이 일던 시기라 땅값이 소폭 상승한 시기였다. 해당 지역의 경우 현지인 거래는 논 7만원 선이었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9~11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현재는 9~10만원 선이다. 대체적으로 논을 구입하여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다. 논은 경지 정리도 잘 되어 있어 시설을 설치하기에도 유리하다. 물도 잘 나오고 교통편도 편리한 조건이 좋은 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기간을 길게 두면 적당한 농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 두 번째로 힘든 점은 자금이다. 농지는 돈이 있어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첫 번째로 언급했고 둘째는 역시 자금 마련이다.

“땅을 사서 자기가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1,500평 면적을 잡았을 때 건적을 최소한 3억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요.”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 귀농 초기에 이만한 금액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E씨는 그간 농업과 관련한 활동을 해온 덕에 운 좋게 독농가와 농약사 등 지역의 네트워크 도움으로 괜찮은 농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농지는 구입을 한 상태이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

현재 해당 지역의 친환경청년농부는 중도에 포기한 청년이 늘었다. 3기까지 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현재 뜻이 맞는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가지면서 농사의 상황이나 정보 등을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청년농부 광역법인에서 준비 중인 '얼굴있는 농부 시장'에는 지역 청년들도 한 부스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만들기 등 직거래를 늘리고 지역 농산물을 홍보해 갈 생각이다.

지역의 청년들

해당 지역에는 청년들이 많은 편이다. 지역 4H 조직은 전국적으로도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작년까지 4H 활동을 하다 지금은 4H 본부에 가입되어 있다. 4H 본부는 4H가 끝난 사람들이 참여하는 후원 조직 성격이다. 4H는 현재 만 40세까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후계농 위주의 모임이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뜻이 맞는 지도부와는 꾸준히 교류를 가지고 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을 거점으로 두고 있지만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친환경농업인협의회와 함께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청년 농장들과 연계하여 청년 사업으로 꾸려갈 예정이다.

(4) 면담자: F씨

영농의 계기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 대한 향수가 있어 기회가 된다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귀농을 결정했다. 배우자의 고향이 가까워서 현재의 지역을 선택했다. 초기에는 고향을 생각했었지만 귀농에 대한 도움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고 마침 지역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련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2017년 7월부터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원래 1년만 체류가 가능했지만 마침 토지를 구하고 집을 짓고 있던 중이어서 양해를 얻어 집이 완공되는 시기까지 머물 수 있었다.

영농 현황

주 작목은 깻잎이고 감자와 당근, 고추, 상추도 일부 심고 있다. 하우스를 두 곳(A면, B면)에 가지고 있는데 A면 소재 3동에는 각각 깻잎, 감자, 그리고 마지막 한 동은 두 개로 나누어 당근과 고추를 심었다. 임대료로 1년에 3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임대 거래를 한 상황이고 임대 기간은 8년이다. B면 소재 하우스는 땅을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집을 신축했다.

매출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깻잎의 경우 손이 많이 가는 작목으로 직원 고용을 위한 인건비가 상당히 든다. 친환경농업 자재 값도 만만치가 않다. 판로는 지역에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 지역에는 20여 가지 다양한 연구회가 마련되어 있으며 품목별 연구회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지역에서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을 받고 있는 청년은 최근에 많이 늘었다. 대부분이 승계농이고 F씨를 포함해서 3명 정도는 기반이 없는 청년이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은 창농 쪽 지원을 롯데가 맡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롯데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지고 해야 하지만 하우스 등 시설만 지원되고 판로는 각자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업단을 통해 롯데에 납품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어 과정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청년 쪽에서 사업단 측에 설명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내년에 광역법인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판로확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시설을 지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5년간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현재 광역법인에서 추진 중인 '얼굴 있는 장터' 사업에도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업체류를 따로 가공품을 만들기도 어려운 환경이라 참여가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농업의 힘든 점

일단 농촌 지역에 새롭게 정착하여 농사짓는 데 가장 힘든 점은 비싼 땅값이었다. 지역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현재의 지역을 선택해 B면에 집을 지었다. A면 하우스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다.

“농지를 사는 건 부담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관리지역이에요. 대부분이 농사짓는 곳이 절대농지거든요. 마침 저희는 거기가 관리지역이라서 거기를 사가지고 대지로 변경을 한 거죠.”

농사 기술 측면도 쉽지는 않다. 또 하우스를 신축하면서 귀농 창업 자금을 융자한 상황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 원금 상환에 대한 우려가 된다. 지역의 땅값이 비싼 편이라 3억 원을 모두 빌린 상황이다.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있지만 지금 현재 경영 상태로 봤을 때 과연 이게 6년차 원금상환이 돌아왔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지역의 청년들

지역의 4H활동은 활발한 편이지만 F씨는 회원으로 가입은 했지만 참석은 저조한 형편이다. 지역에서 청년에 대한 기대가 커서 활동을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활동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현재 청창농 사업의 대상자이기도 해서 지역에서 만나는 청년층은 여러 활동들 가운데 접치는 편이다. 현재 지역에는 안정적인 판매처가 마련되어 있어 지역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보자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5) 면담자: G씨

영농의 계기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지은 지 이제 10년이 되어가는 I씨는 20년 넘게 친환경농업을 해오신 아버지가 몸이 편찮아지시면서 뒤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다.

친환경 착즙 주스로 가공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현재 납품 중인 판매처에 필요한 농산물을 전량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지역 청년들의 농산물을 직접 받아 주스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넓혀갈 생각이다. 초기에 이러한 청년들이 출자할 정도로 여력이 되지 않아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 구성된 외부 출자(4명)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등록하게 되었다. 그 자금으로 현재의 건물과 기계 등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영농 현황

현재 토마토와 오이, 파 농사를 짓고 있으며 한우도 기르고 있다. 부모님은 1,500평을 본인은 800평 땅에서 각자 농사를 짓고 있다. 아버지에게 임대한 상황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임대료를 대신하고 있다. 400평에는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지원으로 하우스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그 절반의 토지를 떼어내어 함께하는 친구에게 내어준 상황으로 하우스가 먼저 들어선다. 착즙 주스 공장은 60평 규모로 아버지 땅을 임대한 상태이다.

농사는 적성에 잘 맞는 편이고 운도 좋았다. 지역에 청년이 부족한 때에 돌아오게 되어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선배들과 지역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농사와 더불어 농산물 가공 부분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농사지를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3명으로 2기를 시작했지만 한 명은 충분한 소득이 마련되지 못해 중도에 포기했다.

현재 해당 지역은 땅 구하기가 쉽지 않아 친환경청년농부사업 포기자가 많은 편이다. 매매는 간혹 나기도 하지만 자금이 없어서 구매하기도 쉽지 않다.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금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가운데 승계농보다 기반 없이 내려온 청년이 더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려오거나 용자를 받아 매매를 하고 있는 경향이 커서 임대를 하는 청년은 한 명에 불과하다.

친환경청년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대부분 지역 친환경 관련 단체에 납품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예비생산자로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친환경 관련 단체에서는 모임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청년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다.

롯데사업과 관련해서는 롯데에 납품을 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롯데 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납품하고 나머지를 지역 친환경 관련 단체에 내고 있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기기도 하면서 청년농부법인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자체 물류를 확보하고 자체 판매망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지역의 청년들

현재 착즙 주스를 기획한 동료 말고도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과 교류가 활발한 편이며 기존에 하고 있던 하우스 농사 이외에도 협업을 통해 품앗이 차원에서 농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한우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지역의 청년 세 명과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현재 G씨는 한우 5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한 친구는 조사료를 생산하고 나머지 한 친구는 풀 작업을 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많아 기본적으로는 그 곳에서 나온 부산물과 유기인증 RPC에서 나온 부산물과 유기농 두부 비지 등을 활용하고 있어 수입산 사료 사용은 30% 정도에 그친다. 해당 지역이어서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친환경 관련 단체도 현재 고령화로 인해 지역 청년들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에서 친환경청년농부로 선발된 청년들과 기본적으로 함께 가려고 하고 있다. 당장은 힘들지만 20년만 지나면 지역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청년들에게 인터넷 판매이든 직거래이든 각자의 판로처를 확보해가면서 버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대한 버티라. 내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힘들어도 버티면 미래는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제가 지금 이렇게 봐도 메리트는 있어 보여요.”

농업이 쉬는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일을 벌여놓은 것도 많아 여가를 전혀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농업이 가진 가능성은 큰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농업의 어려운 점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후계농이어서 어려움이 적었지만 청년농부사업의 경우도 400평 규모의 하우스 시설 4천만 원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농사 규모라고 하기 어렵다.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부딪히는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견디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함께 농사를 짓다가 1년 만에 독립을 했다. 도움을 주는 부분도 많다.

(6) 면담자: H, I씨

영농의 계기

H씨는 대학 졸업 후 친환경 관련 단체에서 실무를 맡아 오다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평소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I씨는 직장 생활을 11년간 해왔지만 10년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니 이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사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

지역의 청년들과 청년농업인협의회

지역에 있는 청년 농업인을 모아 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해 온지 올 해로 3년차가 되었다. 협의회는 매달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팜파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협회의 여러 활동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협업농장이다. 함께 농사짓고 일한 만큼 역할을 분담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회원들이 다함께 양파를 재배했는데 재배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수확 후에 가공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여한 시간에 따라 가능한 한 할당분을 정확히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배분표를 만들어 모두에게 역할을 주고자 하였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양파는 모두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고 역량에 따라 각자의 판매처에 판매하도록 했다. 결과

적으로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적자였던 협의회가 흑자를 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협업농장이지만 외부 인력도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희생과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생산비 조사를 꼼꼼히 진행하였고 외부 인건비 경비로 100만 원을 책정하면서 회원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저절로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에서는 외부 인력 활용에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조직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출자금 예산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이렇게 계산된 총 수입을 가지고 현재 회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또 다른 형태의 협업농장 구조를 통해 지역의 청년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5명의 여성이 출자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인근 지역 농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협업농장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 하나는 직영으로 협의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담형으로 일부가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형태다. 조직 결속력 면에서는 직영이 바람직하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형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업농장 구조는 현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장 운영을 통한 수입의 확보와 자신의 농장에서는 해보지 못한 새로운 작목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 시장성을 발견하고 새롭게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농촌살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협의회가 커지고 안정화되면 1, 2년 후에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무런 기반 없이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에게 교육농장으로서 활용해나갈 생각이다.

농업의 어려운 점

땅을 구하기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다. 직불금 문제와도 결부되어 구두 계약은 해주지만 실제로 임대계약서를 써주는 지역 농가는 많지 않다. 원하는 시설이 마련된 곳을 찾기도 쉽지 않고 하우스 시설이 있는 곳의 경우에도 잘못 지어진 하우스들이 많아 이용하기도 수월하지 않다. 작목마다 그에 맞는 땅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맞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해서 새롭게 농사짓는 청년층에게까지 기회가 잘 안 오는 것 같다.

다음으로 농기계는 청년이 각자 구입해서 쓰기가 쉽지 않은데 고가이기도 해서 쉽게 빌려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청년층이 가능한 농사에 제한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데 드는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 점점 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느낌이다. 특히 용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7) 면담자: J씨

영농의 계기

회사 때문에 지역에 내려와 4년 정도 되었다. 기존의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면서 내 것을 해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농사짓기를 결정했다. 준비 과정에서 친환경 청년농부사업을 접하게 되었다.

“대부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 생각이 조금 러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내 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마찬가지로 또 회사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농사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드는 것도 있긴 있지만...힘이 있을 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맨 처음 했어요.”

이후에 부모님도 귀촌을 결심하고 여러 마을을 둘러보다가 맹지를 포함한 구릉 땅을 구입하고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아버지가 집을 지으면서 농사 터전도 같이 마련하게 되었다.

영농 현황

현재 아버지 토지에 마련된 600평에 100평 하우스 3동과 90평 하우스 3동을 설치했다. 노지에서도 곧 1,000평 정도 농사지를 계획이다. 작목은 파리 고추이다. 농지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의 유기농업조합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푸드플랜 때문에 지역 제한이 걸려 납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곳에도 문의를 해보았지만

필요한 작목은 '파프리카'라는 얘기를 듣고 새로운 작목을 시작하는 것은 부담이 되어 다시 파리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은 받고 있지만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고 있다. 계통 출하의 경우에도 파리고추는 가격이 괜찮은 편이다.

노지 농사는 아직 감이 오지 않지만 계획 중이며 규모를 너무 크지 않게 가져가면서 내후년 정도에는 농업대학이나 마이스터 대학 등에서 체계적인 농사 교육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

해당 지역은 친환경청년농부 사업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가 모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육성 단계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청년농부사업으로 함께해야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국비나 도비 사업의 수혜자들은 일정 부분은 함께 참여하는 활동들을 의무로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관여하여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향후 광역법인에서는 모니터링 역할도 고려해보고 있다. 특히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은 5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해당 연도에 시설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함께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선정 초기에 친환경농업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청년 육성에 대한 필요성으로 친환경청년농부로 선정되었으면 친환경농업 등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대표와 간사, 위원 3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두 세 명이 더 모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전체 사안과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에 매력을 느낀 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안정적으로 판매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농사짓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롯데 측에서 필요한 물량은 매우 소수라 청년농부들이 전량 납품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광역법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하고 있다. 유통 부분이나 사회적 농업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통한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승계농과 기반 없는 청년층의 비율은 3:7 정도이다. 해당 지역은 비교적 기반 없이 새롭게 농사지으려고 들어온 청년들이 많다.

영농의 어려운 점

지역에서 농사지으며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농지 문제를 꼽았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땅이 있어서 했던 부분들은 있는데...제 주위에서 봐도 이번에도 지역에서 한 분이 롯데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포기했던 이유가 땅을 못 구했어요. 자기 땅에는 돌이 너무 많아서 하우스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땅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 현재 지역 친환경청년농부들은 지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농지은행에 있는 땅을 잡아보자. 그냥. 일단 잡아놓고 롯데사업이 들어오면 들어왔는데 혹시 안 되면 이 땅으로 지을 수 있게 내가 5년 경작권을 갖고 있으니 당신 그냥 와서 그것만 내고 지어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게 우선 잡을 수 있는 대로 잡아놓자.”

다음으로 힘든 점은 작목 선택이다. 각 단체에서 필요한 작목과 본인이 할 수 있는 작목이 달라 해결책이 쉽지 않다. 다른 지역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지만 지역이 처한 사정도 만만치 않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친환경청년농부들이 지역에 들어오게 될 텐데 체계적인 작부체계 마련에 대해 조언을 해줄만한 창구가 필요한 것 같다.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판로를 위해) OO 역시도 들어가는 게 OO나 이쪽이랑 다르지 않다. 어차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 사이에 끼고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게 친환경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판로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어렵듯이 했는데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은 하기가...들어와서 어디다 팔라는 건지, 사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현재 파리고추를 재배하면서 계통 출하를 통해 전반적으로는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농산물 가격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8) 면담자: K씨

영농의 계기

농사를 지으러 내려온 것은 2013년 말이었다. 전 직장 동료들과 동업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함께 내려왔다가 농사의 방향성과 업무 효율성,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2014년 봄에 정착하게 되었다. 원래 고향은 다른 곳으로 딸기를 재배하고자 했으나 배우자의 고향이면서 부모님이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인근에 농지를 구하게 되었다. 처음 함께 농사를 짓고자 했던 것은 친구들과 노후를 함께하는 삶을 그렸기 때문이었고, 다음으로 노력한 만큼 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또 기존의 전공을 살려 농업 쪽에 전자 기계를 활용하는 IT기술을 접목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귀농하게 되었다.

“같이 좀 차후에 늙더라도 벗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갖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친구들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고...열정패이를 받기 보다는 안 되더라도 제 것을 열심히 해서 제 것을 만들자 그게 또 목적이었죠.”

실제로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의 접목은 성과로 이어졌다. 국비 사업으로 공모가 났던 청년경쟁력제고사업 부문에서 인근 소각장 자원을 활용해서 녹색성장 스마트팜 농장 구상을 제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또한 하우스 시설이나 관수에 대한 원격 제어와 에너지 활용 기술 덕분에 따뜻한 농막에서 생활도 가능했다.

영농 현황

현재 500평 규모에서 하우스 시설로 딸기와 여주, 수세미를 짓고 있다. 생산한 농작물은 직거래를 주로 하고 있고 반 정도는 도매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판매하고 있다. 지역 시장과 가락동 시장, 약재는 경동시장과 금산 약재시장, 대구 약령시장 등에 직접 내려

가서 판매를 했다.

농기계는 중고로 구입을 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원하는 시기에 빌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영농의 어려운 점

청년이 아무 것도 모를 것이라는 마을 어른들의 시선은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주위에는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에 청년들이 노동력만으로 소비된 것 같은 인상을 받은 청년도 몇 있다. 기존에 농촌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 지역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국비 사업에 참여해보고자 들어갔지만 행정의 제 역할을 못해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

현재 해당 지역의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대상자 가운데 승계농과 기반 없는 청년들 비율은 8:2 정도이다. 친환경청년농부사업으로 롯데에 안정적인 판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절반 정도였다.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을 매개하고 있는 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로 문제보다는 친환경청년농부들의 네트워크 구성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의 역량이 매우 높은 편이라 광역 법인이 생기면 이를 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가고자 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얼굴 있는 장터’나 농진청에서도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가공과 유통, 농기계 자동화 등에 힘을 쏟고자 하고 있다.

광역법인 사업비로 지역별로 교육훈련비가 지원되는데 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모여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이 되면 그거를 해서 좀 새로운 기존 단체들과 다른 푸드플랜이라던지 청년들의 플랜을 가질 수 있는...”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설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가 있는 사업의 그림을 그려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청년들

지역 4H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승계농이 많은 편으로 함께 활동하지는 않고 있다. 지역에서 청년을 육성하려면 다양한 기존 단체들의 활동에 청년 육성을 한 부분으로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행정의 일방적인 움직임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다.

3) 심층 면담 조사 결과: 농지 문제

(1)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

1994년 농지법 개정 이후 개인 간 임대는 금지하고 있고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전에 소유한 땅에 대해서만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농지 임대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두 계약을 통한 임대 형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제재가 농사를 짓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형국이다. 더불어 농사를 지으려는 곳에 항상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농지은행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경지 정리된 논만 나와서 발작물이나 친환경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농지은행의 논은 매립해서 밭으로 쓰는 형태 변화가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 연장은 5~10년까지 딱 한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오는 경우 사전에 여윳돈을 가지고 농지를 매매하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농사짓기가 쉽지 않다. 운 좋게 지역의 마을 어르신들과 관계가 좋고 마을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땅을 장기 임대받아 걱정 없이 농사를 짓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도 뒤틀리는 경우도 있어 마냥 관계에 의존하는 일도 쉽지 않다.

최근 한 청년의 경우 임대한 땅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임대 기간 5년이 끝날 시기가 되자 땅 주인이 농지를 팔 계획이니 나가 달라고 해서 하우스를 뜯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설치한 하우스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둘째 치고 친환경농업으로 다져놓은 땅이 이만저만 아까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정부나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받는 대상자는 농지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 땅' 없이 새로운 지역에서 기반 없이 농사

짓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다.

더불어 임대차 서류를 쓰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정식 임대를 꺼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1996년 이후에 매매가 된 땅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식으로 서류(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쓰는 것을 귀찮아하세요...대부분 8년 자경을 채워서 나중에 땅을 팔아야 될 기회가 됐을 때 팔려고 하죠. 세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깐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자경 기간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정식으로 기록에 남는 임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에게요. 왜냐면 정식으로 임대를 안 하니깐 거기서 나오는 타 작물, 경작 보조금을 땅 주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자료 수집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땅주인도 데리고 와야 하고 땅주인도 서류를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땅주인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도 해요. 계약할 때 직접 와야 하고 공고를 올릴 때도 와야 되요.”

공동 소유주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사전에 땅을 빌리는 협의를 포함하면 총 1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서류 정리를 다 끝내고 나니 겨울이 되어 버려 작물을 심지도 못하고 땅값은 땅값대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계약 파기 보상과 지상권 문제

계약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없다.

“농지은행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해주는 것도 없고 중개를 하면서 보증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파기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일방 파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11%)를 농지은행이 받아가요. 시스템이 너무 답답해요.”

파기의 경우,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땅을 이전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임대차 계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다. 쌍방의 의무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는 땅주인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임대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 정식 임대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시설(에 대한) 보장까지 하면 임대료 상승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까지 보장하면 토지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값을 더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법적 보호가 필요하고 농지은행에서 확실하게 보장해줬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기존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파기와 관련한 보상은 전혀 없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하우스에 대한 지상권까지 포함하여 농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고 있지도 않다.

“시설하우스 지상권이 법적으로 없는데 사람들끼리 거래가 돼요...임대를 해주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때 지상권을 받고 물려줘요. 하우스 200평짜리 4동에 1천 5백만 원에 지상권이 책정됐어요. 근데 법적으로 보호는 못 받고 임대인들끼리 권리금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3) 우선순위 문제

청년들의 경우 농지은행에서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어 혜택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경우에도 대규모의 땅을 빌리려면 임대와 더불어 대형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청년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에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쌀전업농과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어 소농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에서 보유한 땅은 매매는 안 되고 타 작물을 심는 조건으로 임대비도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서 나오고 있지만 기반 없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듯하다.

지역에서 나온 땅은 우선적으로는 지역의 대규모 농가에게 가고 있어 청년층이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역 사정을 고려하면 욕심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한테 올 차례가 없는 거죠. 농어촌공사 말고는 임대 땅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다지 좋지 않은 땅들이고, 농사짓기 여건이 안 좋은 땅들...”

“그나마 지금 농어촌공사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존 농사에서 몇십 년을 아시는 분들끼리 하는 거니까...그분들도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분들도 농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욕심내면 싸움 나요.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하면...욕심내면 무너져요.”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은행의 청년 우선순위 지원 혜택으로 정부 땅을 임대받는 운이 따르기도 해서 타 작물 심는 조건으로 임대비를 80% 감면받기도 했다. 정부에서 타 작물을 심으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100% 직거래를 하거나 유기인증을 받은 서류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벼농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후발 주자들은 우선순위 지원에서도 밀리고 있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이 임대할 수 있는 정부 땅의 임대 가능 규모는 최대 4헥타르(약 1만 2천 평)이다.

농어촌공사는 중앙의 목소리는 들어주지만 지방의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다. 최근 농촌지역으로 내려오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농지은행에서 청년농부들에게 농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창업농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걸로요. 정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 돼요. 농식품부가 농지은행 상위기관이라 농지은행은 눈치만 보죠. 지금 제도는 귀농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농어촌공사를 활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조례 등으로 지역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다양한 청년농부들이 농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 논농사 위주 임대 및 타 작물 생산 원칙 문제

농지은행의 경우 논을 위주로 임대를 주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논농사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다.

“논농사를 짓자니 평수가 최소 3만 평 이상을 해야 생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천 평, 이천 평 논농사 지어서...생계유지할 수 있는 평수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특히 농지은행 논의 경우 정부에서는 쌀 목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3년간 타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있다. 5년간 임대를 하면 3년은 타 작물을 심고 2년간 벼 재배가 가능하게 되는 셈인데, 타 작물 생산의 경우 이를 위해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거나 그렇게 재배하더라도 수확물을 판매하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이를 위반하고 벼를 심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관리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5) 공고 관련 문제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비용은 농지의 위치와 생김새에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나오는 편이다. 보통은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하고 있지만 정보 전달이 잘 되지 않고 내정자가 있는 것 같다는 등 형식적인 공고 문제가 지적되었다. 농지은행 관계자들이 사전에 지원자들의 우선순위 등 상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도 보이지만,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공고를 법적으로 올려야 돼서, (진행은) 하는데 그 공고는 이미 선정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신청을 해도 내정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고난 걸 보고 찾아가면 땅이 없어요...양지화 사업이 아니라 음지화 사업 같아요.”

“이미 이제 가면 농지가 없어. 공고는 냈는데...취소해 달라고...누가 했으니까 이거 순위 위에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취소하라고...”

(6)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지원 사업이 농지를 빌리는 데 장애가 되기도 했다. 생애 첫 농지 구입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마다 땅값을 고려하지 않고 평당 5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 융자금을 받아버리면 다른 대출을 못 받게 된다. 또 남은 돈은 모두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불안정한’ 임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귀농 단계 초기에 농지를 구입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봤을 때는 그거를, 자기 땅을 다시 계속 갈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안주하다 보니...그쪽을 알았으면 서서히 그쪽으로 옮기는 좀 기간적인 것과 그런 거를 다 시간적 여유를 받았을 텐데, 그거를 못하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어렵다. 그래서 농업을 시작할 때는 1순위는 자기 땅이 있어야지 모든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또 다른 경우로는 지역 주민이 청년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사업비와 연계되면서 경작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도 했다. 농지은행에서 빌린 농지 상태가 좋지 않아 주인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청년농부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은행 임대계약서가 필요해서 최저 세금 수준에서 매년 30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농지를 가다듬는 포크레인 비용으로만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농지은행에서는 수수료 5% 때문에 무상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보조금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세무 실적이나 퇴비, 비료 신청 등에는 경영체가 필요한데, 직불금과 연계되어 있어 땅을 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7) 경자유전 문제

문제는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골에 보면 농민들 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가진 땅보다 도시에 있는 분들이 가진 땅들이 더 많죠. 투기로 가지고 있던, 그런 게 많죠.”

지역에 따라 농지 값 차이가 많이 나 비싼 곳에서는 보상 쪽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여기가 쥔 싸 거예요. ○○ 이런 데 가면 논도 백만 원예요. 그쪽 분들은 농사에 크게 메리트가, 이제 없어요. 땅값이 워낙 저기 돼서 기본 보상받으면 몇 십 억씩 받으시니 크게 농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경자유전이 안 되는 거(인 것) 같아요.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법으로 정해놨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투자가치로 땅을 많이 가지죠. 근데 땅 소유하고 팔려고 하니 자경조건을 채워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죠.”

“경자유전의 법칙이 그 있잖아요, 농지법에. 그래서 농지와 가까워야 되고 농업 외 소득이 없어야 되고, 원래 농업인이 농지를 구하는 게 맞는데...그런 거를, 그 기준을 농지이용계획서를 통해서 걸러야 되는 건데 그냥 패스하다 보니...”

농지 문제는 농지법상에서 정하는 경자유전의 법칙만 잘 지켜져도 문제가 없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청년들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이용계획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작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는 농지이용계획서 같은 것은 유명무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 청년 농업인 실태 설문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여기에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에 이어 충남의 보다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으로 연령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하였다. 설문 실시 방법은 주로 충남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기존에 지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부탁하고 직접 회수하였다. 여러 청년 농업인들에게 중복되어 설문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설문지 항목의 구성은 2016년 일본농업회의소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지를 참고로 하였다²⁸⁾. 설문 기간은 심층면담을 시작한 2019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총 9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74명으로부터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이 가운데 나이가 만 39세가 넘어 제외된 것이 7명으로 총 67명이 실태 설문 조사의 대상자가 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는 같은 청년 농업인이라도 전혀 기반 없이 시작한 경우와 조금이라도 기반이 있는 경우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비승계창농과 승계창농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설문 항목 가운데 ‘영농상황에 따른 구분’에서 ‘토지 등을 독자적으로 조달하고 새롭게 농업경영을 개시’하거나 ‘가족의 농업경영’이나 ‘배우자 가족의 농업경영’과 별개로 새롭게 개시한 경우를 ‘비승계창농’으로 하였고, 가족이나 배우자 가족의 경영 전부 혹은 일부를 계승하여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우는 ‘승계창농’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비승계창농은 33명, 승계창농은 34명으로 구분되어졌다.

28)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는 1996년부터 5년마다 청년의 신규취농 실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 설문 조사 결과

(1) 일반적인 사항

지역별로는 비승계창농과 승계창농 모두 예산군, 아산시, 홍성군 거주 조사 대상자가 많았다.

[표 23] 영농장소

영농장소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주시	1	3.0%	-	-
금산군	2	6.1%	1	2.9%
논산시	1	3.0%	4	11.8%
보령시	1	3.0%	-	-
부여군	2	6.1%	3	8.8%
서산시	1	3.0%	1	2.9%
서천군	3	9.1%	1	2.9%
아산시	7	21.2%	5	14.7%
예산군	10	30.3%	13	38.2%
천안시	2	6.1%	1	2.9%
홍성군	3	9.1%	5	14.7%
합계	33	100%	34	100%

연령으로는 비승계창농은 만 35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가장 높았고 만 30세 미만의 비율도 18.2%를 나타냈고, 승계창농의 경우는 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과 만 35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절반 정도였다. 비승계창농의 경우 더 낮은 연령층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연령(만)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5세 미만	-	-	1	2.9%
25세 이상 30세 미만	6	18.2%	1	2.9%
30세 이상 35세 미만	12	36.4%	16	47.1%
35세 이상 40세 미만	15	45.5%	16	47.1%
합계	33	100%	34	100%
평균연령	34.0세		34.1세	

성별로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여성 비율이 33.3%인데 반해 승계창농의 여성 비율은 14.7%를 나타냈다.

[표 25] 성별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자	22	66.6%	29	85.3%
여자	11	33.3%	5	14.7%
합계	33	100%	34	100%

가족 수로는 비승계창농은 1명과 4명, 다음으로 2명과 3명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승계창농의 경우는 3명, 4명, 5명의 순이었다. 평균적으로는 비승계창농은 2.8명이, 승계창농은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가족 수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명	8	25.0%	2	5.9%
2명	6	18.8%	2	5.9%
3명	6	18.8%	12	35.3%
4명	7	21.9%	9	26.5%
5명	5	15.6%	6	17.6%
6명	-	-	3	8.8%
합계	31	100%	34	100%
평균	2.8명		3.7명	

최종학력은 비승계창농과 승계창농 모두 농학계 이외의 대학, 대학원이 가장 높았고 농학계 이외 전문학교와 농학계 대학 및 대학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최종학력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등학교(농업고교)	1	7.1%	1	2.9%
고등학교(농업고교 이외)	4	28.6%	5	14.7%
농업대학교	1	7.1%	3	8.8%
전문학교(농학계)	1	7.1%	-	-
전문학교(농학계 이외)	6	42.9%	7	20.6%
대학, 대학원(농학계)	6	42.9%	5	14.7%
대학, 대학원(농학계 이외)	14	43.8%	13	38.2%
합계	32	100%	34	100%

농가출신 여부는 비승계창농의 54.5%가 농가출신이 아니면서 비승계창농한 것으로 나타났고, 27.3%가 농가출신, 18.2%는 부모 혹은 조부모가 농가출신이라는 하지만 스스로

경영을 개시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창농의 경우에는 73.5%가 농가출신이었고, 14.7%가 농가출신이 아니지만 배우자 쪽의 영향으로 승계창농 형태로 영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농가출신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가출신이 아님	18	54.5%	5	14.7%
부모가 농가 출신이 아니지만, 조부모는 농가출신임	6	18.2%	4	11.8%
농가출신임	9	27.3%	25	73.5%
합계	33	100%	34	100%

영농 전 업종으로는 비승계창농이 제조업, 학생, 교육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은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업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영농 전 업종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	2	6.5%	5	14.7%
임어업	-	-	1	2.9%
제조업	6	19.4%	2	5.9%
건설업	1	3.2%	-	-
자영업	3	9.7%	3	8.8%
운송, 배송업	-	-	1	2.9%
관공서 및 단체	2	6.5%	1	2.9%
교육 관련	4	12.9%	-	-
통신정보관련 서비스업	-	-	3	8.8%
그 외 서비스업	2	6.5%	4	11.8%
금융증권업	-	-	1	2.9%
의료 관계	1	3.2%	1	2.9%
학생	4	12.9%	7	20.6%
무직	-	-	1	2.9%
기타	6	19.4%	4	11.8%
합계	31	100%	34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비승계창농은 51.5%, 승계창농은 44.1%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수령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받고 있다	17	51.5%	15	44.1%
받고 있지 않다	16	48.5%	19	55.9%
합계	33	100%	34	100%

국비사업으로 충남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청년농부사업(일명 롯데사업)은 응답자의 62.5%가 받고 있었으며 승계창농은 75.0%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친환경청년농부사업 지원수령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받고 있다	20	62.5%	24	75.0%
받고 있지 않다	12	37.5%	8	25.0%
합계	32	100%	32	100%

(2) 영농 경위

영농 준비 기간으로는 양쪽 그룹 모두 1년 이상 2년 미만(각각 58.1%, 40.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각각 16.1%,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승계창농의 경우 평균 준비 기간은 1.6년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승계창농은 2.8년으로 보다 긴 기간을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영농 교육 기간은 비승계창농이 26개월이었고 승계창농은 2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영농 준비 기간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년 미만	4	12.9%	5	15.6%
1년 이상 2년 미만	18	58.1%	13	40.6%
2년 이상 3년 미만	4	12.9%	2	6.3%
3년 이상	5	16.1%	12	37.5%
합계	31	100%	32	100%
평균 준비 기간 (영농 교육 기간)	1.6년 (26개월)		2.8년 (20개월)	

영농 이유로는 ‘농업은 하는 만큼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가 비승계창농과 승계창농에서 각각 1, 2순위와 공동 2위를 나타냈다. 승계창농은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가 가장 높았다. 다음 순위로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농촌 생활(시골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은 ‘농가 후계자이기 때문에’라는 대답을 보였다.

[표 33] 영농 이유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은 하는 만큼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43	21.8%	23	11.4%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0	20.3%	23	11.4%
농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2	1.0%	12	5.9%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12	6.1%	24	11.9%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9	4.6%	12	5.9%
유기농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10	5.1%	12	5.9%
이전에 해오던 일의 기술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3	1.5%	7	3.5%
아이를 기르는데 환경이 좋기 때문에	10	5.1%	7	3.5%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0	5.1%	10	5.0%
자연과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7	3.6%	4	2.0%
농촌 생활(시골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20	10.2%	12	5.9%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가 후계자이기 때문에	3	1.5%	21	10.4%
배우자의 가족이 농가이기 때문에	1	0.5%	-	-
도시 생활이 맞지 않기 때문에	9	4.6%	7	3.5%
월급쟁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12	6.1%	18	8.9%
그 외	6	3.0%	10	5.0%
합계	197	100%	202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지역을 선택할 때 정보를 얻은 곳으로는 양쪽 그룹에서 모두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나타났다.

[표 34] 지역을 선택할 때 정보를 얻은 곳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광역시자치체)나 전국단위의 귀농상담창구	1	3.1%	1	2.6%
농업기술센터	5	15.6%	9	23.7%
시군읍면	1	3.1%	1	2.6%
농협	-	-	1	2.6%
교육기관	3	9.4%	2	5.3%
일반농가, 농업법인	3	9.4%	3	7.9%
인터넷	1	3.1%	1	2.6%
부모, 형제, 친지, 지인	17	53.1%	20	52.6%
그 외	1	3.1%	-	-
합계	32	100%	38	100%

농지를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으로는 양쪽 그룹에서 모두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이 가장 높았으나 비승계창농은 2순위로 부동산업자를, 승계창농은 농어촌공사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농지를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광역시자치체)나 전국단위의 귀농상담창구	-	-	2	4.3%
농업기술센터	1	2.8%	3	6.5%
시군읍면	-	-	1	2.2%
농협	-	-	3	6.5%
교육기관	1	2.8%	2	4.3%
일반농가, 농업법인	3	8.3%	3	6.5%
농업대학교 등	1	2.8%	-	-
인터넷	2	5.6%	2	4.3%
농업자재, 기계 등 업자	1	2.8%	-	-
부동산업자	10	27.8%	1	2.2%
유통, 소매업자	-	-	1	2.2%
부모, 형제, 친지, 지인	12	33.3%	20	43.5%
농어촌공사	2	5.6%	6	13.0%
은행 등 금융기관	-	-	1	2.2%
그 외	3	8.3%	1	2.2%
합계	36	100%	46	100%

판매처를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은 양쪽 그룹에서 모두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비승계창농은 ‘유통, 소매업자’, 농협과 인터넷의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승계창농은 ‘유통, 소매업자’와 ‘일반농가, 농업법인’, 그리고 농협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판매처를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광역시자치체)나 전국단위의 귀농상담창구	1	2.0%	1	1.8%
농업기술센터	4	7.8%	2	3.5%
시군읍면	1	2.0%	2	3.5%
농협	7	13.7%	7	12.3%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육기관	4	7.8%	1	1.8%
일반농가, 농업법인	4	7.8%	8	14.0%
농업대학교 등	1	2.0%	-	-
서적이나 잡지	-	-	1	1.8%
인터넷	6	11.8%	5	8.8%
유통, 소매업자	8	15.7%	8	14.0%
직업소개소	-	-	1	1.8%
부모, 형제, 친지, 지인	11	23.5%	17	29.8%
은행 등 금융기관	-	-	1	1.8%
그 외	3	5.9%	3	5.3%
합계	51	100%	57	100%

주택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으로는 양쪽 그룹에서 모두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이 가장 높았으나 비승계창농은 부동산업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순으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은 농협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주택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기술센터	2	6.1%	2	5.9%
시군읍면	1	3.0%	1	2.9%
농협	-	-	4	11.8%
교육기관	1	3.0%	1	2.9%
일반농가, 농업법인	-	-	2	5.9%
인터넷	1	3.0%	1	2.9%
농업자재, 기계 등 업자	1	3.0%	-	-
부동산업자	9	27.3%	2	5.9%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 형제, 친지, 지인	12	36.4%	15	44.1%
은행 등 금융기관	4	12.1%	2	5.9%
그 외	2	6.1%	4	11.8%
합계	33	100%	34	100%

자금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으로는 비승계창농은 농업기술센터, ‘은행 등 금융기관’, 농협,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의 순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승계창농은 1순위가 ‘부모, 형제, 친지, 지인’,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농협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자금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광역시자치체)나 전국단위의 귀농상담창구	1	2.2%	3	5.6%
농업기술센터	12	26.7%	7	13.0%
시군읍면	2	4.4%	4	7.4%
농협	8	17.8%	6	11.1%
교육기관	1	2.2%	2	3.7%
일반농가, 농업법인	1	2.2%	3	5.6%
서적이나 잡지	-	-	1	1.9%
인터넷	3	6.7%	2	3.7%
부모, 형제, 친지, 지인	4	8.9%	15	27.8%
농어촌공사	3	6.7%	1	1.9%
은행 등 금융기관	9	20.0%	7	13.0%
그 외	1	2.2%	3	5.6%
합계	43	100%	54	100%

영농하는 가운데 힘들었던 점으로는 양쪽 그룹 모두 자금확보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양쪽 그룹 모두 농지확보, 영농기술 습득을 2, 3순위로 대답했다. 승계창농은 그 다음 순위로서 '가족의 이해'를 꼽았다.

[표 39] 영농하는 가운데 힘들었던 점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담창구 찾기	8	4.1%	14	7.0%
가족의 이해	9	4.6%	24	11.9%
지역선택	1	0.5%	2	1.0%
영농기술 습득	40	20.6%	41	20.4%
농지확보	55	28.4%	35	17.4%
자금확보	62	32.0%	67	33.3%
주택확보	11	5.7%	10	5.0%
그 외	8	4.1%	8	4.0%
합계	194	100%	201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영농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을 선택한 이유로는 양쪽 그룹 모두 가족의 고향이 가깝거나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취득 및 임대할 농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높았다.

[표 40] 영농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을 선택한 이유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행정 등의 준비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10	5.9%	8	4.1%
영농지도체제가 충실해서	-	-	3	1.5%
취득 및 임대할 농지가 있어서	27	15.9%	27	13.9%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희망한 작목에 적합한 지역이어서	12	7.1%	10	5.2%
(판매 측면도 포함해서) 도시로의 접근이 좋아서	11	6.5%	-	-
자연환경이 좋아서	13	7.6%	10	5.2%
그 지역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어서	19	11.2%	24	12.4%
취업할 곳 혹은 교육받을 곳이 있어서	5	2.9%	-	-
가족의 고향이 가까워서	31	18.2%	29	14.9%
고향이어서	19	11.2%	59	30.4%
농사짓는 친구가 있어서	4	2.4%	7	3.6%
배우자의 고향이 농촌이어서	6	3.5%	4	2.1%
그 외	21	12.4%	13	6.7%
합계	178	100%	194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영농 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로는 비승계창농은 절반 이상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은 절반 이상이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영농 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받았다	19	57.6%	16	47.1%
받지 않았다	14	42.4%	18	52.9%
합계	33	100%	34	100%

영농 전 교육받은 주요 기관으로는 양쪽 그룹 모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승계창농은 '선도농가 이외의 일반농가'와 귀농관련학교 순으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은 선도농가와 농업대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영농 전 교육받은 주요 기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반농가(선도농가)	2	12.5%	4	26.7%
일반농가(선도농가 이외)	3	18.8%	-	-
농업법인	2	12.5%	-	-
시군농업기술센터	6	37.5%	7	46.7%
농업대학교	-	-	2	13.3%
귀농관련학교	3	18.8%	-	-
그 외	-	-	2	13.3%
합계	16	100%	15	100%

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양쪽 그룹 모두 '희망작목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천적으로 경영 및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와 형제, 친지, 지인이 권해서'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교육기관의 선택 이유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와 형제, 친지, 지인이 권해서	15	14.4%	15	16.3%
귀농상담센터에서 권해서	9	8.7%	2	2.2%
희망작목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서	23	22.1%	21	22.8%
교육제도가 충실해서	13	12.5%	6	6.5%
실천적으로 경영 및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	19.2%	20	21.7%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영농 실적이 많아서	4	3.8%	8	8.7%
교육기관 사람들이 좋아서	3	2.9%	1	1.1%
고향과 가까워서	11	10.6%	11	12.0%
배우자의 고향과 가까워서	-	-	4	4.3%
그 외	6	5.8%	4	4.3%
합계	104	100%	92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영농을 준비하면서 대략 영농 후 1년간 필요한 기계 및 시설 등 취득비용(토지취득 비용은 제외. 트랙이나 제초기 등 영농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은 비승계창농의 58.6%가 5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창농은 39.3%가 5천만 원 미만을 나타냈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과 1억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각각 21.4%, 3억 원 이상도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 금액은 비승계창농은 7천만 원인데 반해 승계창농은 비승계창농의 2.7배에 가까운 1억 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기계 및 시설 등 취득비용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17	58.6%	11	39.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	17.2%	6	21.4%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	13.8%	6	21.4%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	3.4%	2	7.1%
3억 원 이상	2	6.9%	3	10.7%
합계	29	100%	28	100%
평균 금액	7천만 원		1억 9천만 원	

영농 후 1년간 필요한 비료, 종묘, 연료비 등 '필요경비'로는 양쪽 그룹 모두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이 높았다. 평균 금액으로는 비승계창농은 1천 7백만 원인데 반해 승계창농이 2천 3백만 원으로 승계창농이 비승계창농에 비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필요경비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천만 원 미만	9	31.0%	9	32.1%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8	27.6%	9	32.1%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6	20.7%	3	10.7%
3천만 원 이상	6	20.7%	7	25.0%
합계	29	100%	28	100%
평균 금액	1천 7백만 원		2천 3백만 원	

영농 준비 단계부터 영농 후 1년간 취득(구입)한 농지 구입 여부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69.0%가 구입한 농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의 경우 71.9%가 구입한 농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농지 구입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입한 농지가 있다	20	69.0%	9	28.1%
구입한 농지가 없다	9	31.0%	23	71.9%
합계	29	100%	32	100%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비승계창농의 경우 5천㎡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고, 승계창농은 5천㎡ 미만과 1만㎡ 이상이 각각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평균 취득농지

면적은 비승계창농은 4천 9백㎡, 승계창농은 6천 4백㎡로 나타나 승계창농이 비승계창농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취득한 농지의 면적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 미만	10	50.0%	3	37.5%
5천㎡ 이상 1만㎡ 미만	9	45.0%	2	25.0%
1만㎡ 이상	1	5.0%	3	37.5%
합계	20	100%	8	100%
평균 농지 취득 면적	4천 9백㎡		6천 4백㎡	

취득한 농지의 금액으로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가장 높았고 승계창농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 농지 취득 금액으로는 비승계창농이 1억 3천 6백만 원으로 승계창농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취득한 농지의 금액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억 원 미만	6	31.6%	4	57.1%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9	47.4%	2	28.6%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	15.8%	-	-
3억 원 이상	1	5.3%	1	14.3%
합계	19	100%	7	100%
평균 농지 취득 금액	1억 3천 6백만 원		1억 1천 4백만 원	

농지 취득시 활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양쪽 그룹 모두에서 농협이 가장 높았고 비승계창농의 경우 46.4%였던 것에 반해 승계창농은 70.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9] 농지 취득시 활용 금융기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어촌공사	2	7.1%	-	-
농협	13	46.4%	7	70.0%
은행 등 금융기관	2	7.1%	-	-
자기자금	8	28.6%	3	30.0%
그 외	3	10.7%	-	-
합계	28	100%	10	100%

영농하기 위해 준비한 자기자본금은 비승계창농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가장 높은 데 반해 승계창농은 5천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0%를 차지했지만 2억 원 이상의 비율도 높아 전체 자기자본금 평균 금액은 비승계창농이 8천 2백만 원인 데 반해, 승계창농은 비승계창농에 비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전체 자기자본금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8	29.6%	17	63.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	33.3%	4	14.8%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7	25.9%	2	7.4%
2억 원 이상	3	11.1%	4	14.8%
합계	27	100%	27	100%
전체 자기자본금 평균 금액	8천 2백만 원		1억 4천 6백만 원	

영농하기 위해 준비한 자기자본금 가운데 농지/기계/시설 취득, 영농을 위한 자기자본금은 비승계창농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이 47.6%인 데 반해, 승계창농은 73.9%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계창농의 경우 2억 원 이상의 비율이 13.0%로 나타나 평균 취득 자금은 비승계창농이 6천 4백만 원인 데 반해, 승계창농은 2.3배 이상인 1억 4천 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농지/기계/시설 취득, 영농을 위한 자기자본금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10	47.6%	17	73.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6	28.6%	-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5	23.8%	3	13.0%
2억 원 이상	-	-	3	13.0%
합계	21	100%	23	100%
평균 농지/기계/시설 취득, 영농 자기자본금	6천 4백만 원		1억 4천 5백만 원	

영농하기 위해 준비한 자기자본금 가운데 생활 자금은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양쪽 모두 5천만 원 미만이 각각 84.2%, 88.2%로 가장 높았고 승계창농은 2억 원 이상의 비율도 있어 평균 생활 자금은 비승계창농이 2천 7백만 원인 것에 반해 승계창농은 3천 3백만 원으로 비승계창농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생활 자금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16	84.2%	15	88.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	10.5%	-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	5.3%	1	5.9%
2억 원 이상	-	-	1	5.9%
합계	19	100%	17	100%
평균 생활 자금	2천 7백만 원		3천 3백만 원	

영농자금 대출 여부로는 비승계창농의 75.0%가 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계창농은 절반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영농자금 대출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빌렸다	24	75.0%	17	50.0%
빌리지 않았다	8	25.0%	17	50.0%
합계	32	100%	34	100%

영농자금 대출시 지장을 느꼈던 부분으로는 비승계창농은 상환기간이 짧다는 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담보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승계창농은 상환기간이 짧은 문제와 담보확보가 각각 18.4%를 차지했고 특별히 지장을 느낀 적이 없다는 대답도 13.8%를 차지했다.

[표 54] 영농자금 대출시 지장을 느꼈던 부분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증인 확보	2	1.6%	9	10.3%
담보 확보	29	22.8%	16	18.4%
이용가능한 제도자금이 없었다	10	7.9%	4	4.6%
금리가 비싸다	22	17.3%	12	13.8%
융자액에 적다	20	15.7%	11	12.6%
상환기간이 짧다	37	29.1%	16	18.4%
특별히 지장을 느낀 적 없다	4	3.1%	12	13.8%
기타	3	2.4%	7	8.0%
합계	127	100%	87	100%

주거확보 방법으로는 비승계창농은 고향집이 3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가 이외의 빈집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창농은 66.7%가 고향집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농가의 집을 빌리거나 농가 이외의 빈집을 샀다고 대답했다.

[표 55] 주거확보 방법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가의 빈집을 빌렸다	4	12.5%	3	9.1%
농가 이외의 빈집을 빌렸다	6	18.8%	-	-
공영임대주택을 빌렸다	-	-	1	3.0%
민간임대주택을 빌렸다	4	12.5%	-	-
농가 이외의 빈집을 샀다	1	3.1%	3	9.1%
신축했다	4	12.5%	2	6.1%
고향집	10	31.3%	22	66.7%
배우자의 고향집	-	-	1	3.0%
기타	3	9.4%	1	3.0%
합계	32	100%	33	100%

(3) 농업경영 상황

현재와 영농 초창기의 농업경영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영농 초창기 1년차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영농 초창기 진입 나이로는 비승계창농은 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이 43.5%로 가장 높았던 데 반해 승계창농은 만 35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46.4%로 가장 높았다. 승계창농은 만 25세 미만에 진입한 경우도 있었다.

[표 56] 현재와 영농 초창기의 나이(만)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5세 미만	-	-	-	-	1	3.0%	1	3.6%
25세 이상 30세 미만	6	20.0%	6	26.1%	1	3.0%	6	21.4%
30세 이상 35세 미만	11	36.7%	10	43.5%	15	45.5%	8	28.6%
35세 이상 40세 미만	13	43.3%	7	30.4%	16	48.5%	13	46.4%
합계	30	100%	23	100%	33	100%	28	100%

농업경영 규모 변화는 우선 농업경영 경지면적은 비승계창농은 1년차에 평균 1,670㎡에서 2019년 현재 2,077㎡인 것으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은 1년차 평균 3,410㎡에서 현재 5,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승계창농은 영농 초기에 비해 약 1.2배 규모가 확장되었고, 승계창농은 약 1.5배 규모가 확대되었다. 위 경지면적 가운데 임대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1년차 평균 1,306㎡에서 현재 1,713㎡이었으며 승계창농은 각각 2,582㎡, 4,989㎡로 나타났다. 비승계창농의 경우 현재 임대 비율은 전체 농업경영 경지면적의 82.5%를 차지하고 있었고, 승계창농의 경우 임대 비율은 전체 면적의 97.0%에 달했다.

임대 면적 규모는 비승계창농은 영농 초기에 비해 약 1.3배, 승계창농은 약 1.9배가 확대되었으며, 임대 비율 역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원예의 경우 시설면적은 비승계창농은 1년차 평균 909㎡, 현재 1,139㎡이었고, 승계창농은 각각 1,209㎡, 1,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경영의 경우 비승계창농 가운데 1두를 키우는 경우가 있었고, 승계창농은 초기 평균 30두에서 현재 평균 204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농업경영 규모 변화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농업경영 경지면적	28	2,077㎡	18	1,670㎡	28	5,143㎡	20	3,410㎡
위 면적 중 임대 (임대 비율)	14	1,713㎡ (82.5%)	9	1,306㎡ (78.2%)	19	4,989㎡ (97.0%)	11	2,582㎡ (75.7%)
시설원예의 경우 시설면적	19	1,139㎡	9	909㎡	21	1,343㎡	11	1,209㎡
축산경영의 경우 사양두수	1	1두	1	1두	7	204두	3	30두

주요 작목 변화로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1년차에는 시설채소가 48.4%, 일반채소 18.8%, 수도작이 12.5%, 공예작목(허브 등)과 과수 및 '보리, 잡곡류, 두류' 순에서 현재는 시설채소 비율이 영농 초기에 비해 10%p 정도 줄어들어 37.8%를 나타냈고, '보리, 잡곡류, 두류'는 두 배 가량, 과수와 버섯은 조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승계창농의 경우는 비승계창농에 비해 다양한 작목들을 생산하고 있었고 영농 1년 차에 수도작이 21.7%,

버섯 17.4%, 일반채소, 시설채소 순이었으나 현재는 시설채소가 28.0%로 가장 많았고 수도작은 1년차에 비해 줄어들어 15.9%였고, 버섯도 9.1%로 감소했다. 기타 경종작물과 과수, 육용우비육 등 작목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표 58] 주요 작목 변화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도작	16	14.4%	8	12.5%	21	15.9%	15	21.7%
보리, 잡곡류, 두류	10	9.0%	3	4.7%	8	6.1%	7	10.1%
일반채소	22	19.8%	12	18.8%	18	13.6%	10	14.5%
시설채소	42	37.8%	31	48.4%	37	28.0%	9	13.0%
화훼	1	0.9%	-	-	3	2.3%	3	4.3%
공예작목(허브 등)	5	4.5%	5	7.8%	5	3.8%	3	4.3%
과수	12	10.8%	5	7.8%	2	1.5%	-	-
버섯	3	2.7%	-	-	12	9.1%	12	17.4%
사료작물	-	-	-	-	2	1.5%	2	2.9%
기타 경종작물	-	-	-	-	6	4.5%	-	-
낙농	-	-	-	-	6	4.5%	3	4.3%
육용우번식	-	-	-	-	10	7.6%	5	7.2%
육용우비육	-	-	-	-	2	1.5%	-	-
합계	111	100%	64	100%	132	100%	69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농산물(농산가공 등 포함) 매출 변화는 비승계창농은 5천만 원 미만이 1년차에는 80.0%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는 5천만 원 미만이 65.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5.0%,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10.0%를 차지하고 있었다. 승계창농은 1년차에는 5천만 원 미만이 64.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1.4%를 차지했다. 현재는 5천만 원 미만이 절반 정도였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0.8%,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16.7%, 2억 원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비승계창농이 1년차 3천 3백만 원에서 현재 4천 2백만 원으로 1.3배 늘었다. 승계창농은 1년차 5천 2백만 원에서 현재 1억 1천 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2.2배 늘어났다. 승계창농의 현재 평균이 비승계창농의 2.8배임을 알 수 있다.

[표 59] 농산물 매출 변화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13	65.0%	8	80.0%	13	54.2%	9	64.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	25.0%	1	10.0%	5	20.8%	3	21.4%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2	10.0%	1	10.0%	4	16.7%	1	7.1%
2억 원 이상	-	-	-	-	2	8.3%	1	7.1%
합계	20	100%	10	100%	24	100%	14	100%
평균 농산물 매출	4천 2백만 원		3천 3백만 원		1억 1천 6백만 원		5천 2백만 원	

농업소득 변화로는 비승계창농은 1년차에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44.4%를 차지하고 있었고 1천만 원 미만이 33.3%였다. 2019년 현재는 1천만 원 미만이 25.0%로 영농 초기에 비해 8.3%p 줄어든 대신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65.0%로 20.6%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창농은 1년차에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6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천만 원 미만과 1억 원 이상이 각각 14.3% 수준을 보였다. 현재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58.3%를 보였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0.8%로 늘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비승계창농은 영농 초기 3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천 7백만 원으로 10.0%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승계창농은 4천 5백만 원에서 3천 5백만 원을 나타내 22.0% 줄어들었다. 승계창농의 현재 평균 농업소득은 비승계창농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농업소득 변화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천만 원 미만	5	25.0%	3	33.3%	3	12.5%	2	14.3%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3	65.0%	4	44.4%	14	58.3%	9	64.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	5.0%	1	11.1%	5	20.8%	1	7.1%
1억 원 이상	1	5.0%	1	11.1%	2	8.3%	2	14.3%
합계	20	100%	9	100%	24	100%	14	100%
평균 농업소득	2천 7백만 원		3천만 원		3천 5백만 원		4천 5백만 원	

본인의 농외소득 변화로는 비승계창농은 1년차에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60.0%로 가장 높았고 2019년 현재는 70.0%로 늘었다. 승계창농은 1년차에 1천만 원 미만이 62.5%로 가장 높았고 현재는 1천만 원 미만이 54.5%를 차지하였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도 9.1%를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농외소득은 비승계창농은 1년차 1천만 원에서 현재 1천 5백만 원으로 1.5배 늘었다. 승계창농은 9백만 원에서 1천 3백만 원으로 1.4배 증가했다. 현재 평균 농외소득은 비승계창농이 승계창농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농외소득 변화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천만 원 미만	3	30.0%	2	40.0%	6	54.5%	5	62.5%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7	70.0%	3	60.0%	4	36.4%	3	37.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	-	1	9.1%	-	-
1억 원 이상	-	-	-	-	-	-	-	-
합계	10	100%	5	100%	11	100%	8	100%
평균 농외소득	1천 5백만 원		1천만 원		1천 3백만 원		9백만 원	

취업상황 변화로는 가족농업종사자수는 비승계창농은 1년차는 2.1명에서 2019년 현재 1.8명으로 줄었고, 승계창농은 1년차와 현재 모두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외

농업종사자수는 응답자 자체가 적기도 했지만, 비승계창농은 1년차 3.5명에서 현재 2.0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은 2.7명에서 4.3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영농 고용자 수(상시채용)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1년차는 1.0명에서 2.0명으로, 승계창농은 1.0명에서 현재 3.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취업상황 변화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가족농업종사자수	12	1.8명	8	2.1명	24	2.3명	15	2.3명
가족 이외 농업종사자수	4	2.0명	2	3.5명	7	4.3명	3	2.7명
영농 고용자수(상시채용)	4	2.0명	1	1.0명	3	3.3명	1	1.0명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비승계창농은 78.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승계창농은 절반 정도가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표 63] 농업으로 생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6	21.4%	16	48.5%
그렇지 않다	22	78.6%	17	51.5%
합계	28	100%	33	100%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된다고 느낀 시점으로는 비승계창농은 2.9년 후, 승계창농은 3.3년 후로 답했다. 그때의 농업매출과 농업소득은 비승계창농은 각각 6천 7백만 원, 5천 1백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승계창농은 각각 5천 7백만 원, 3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농업매출과 농업소득 수준을 승계창농에 비해 비승계창농이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 생계 유지 시기 및 농업매출과 농업소득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영농 후(몇 년째)	7	2.9년	12	3.3년
농업매출	7	6천 7백만 원	11	5천 7백만 원
농업소득	6	5천 1백만 원	10	3천 5백만 원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생계 유지 시기는 비승계창농은 '알 수 없다'는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고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승계창농 역시 '알 수 없다'가 3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이였다. 평균적으로는 비승계창농은 2.5년, 승계창농은 9년 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생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년 미만	7	31.8%	3	17.6%
3년 이상 5년 미만	5	22.7%	3	17.6%
5년 이상	1	4.5%	5	29.4%
알 수 없음	9	40.9%	6	35.3%
합계	22	100%	17	100%
평균	2.5년		9년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 실천과 관련해서는 모든 작물을 유기농업으로 하고 있는 비율은 비승계창농이 16.1%, 승계창농이 26.5%로 승계창농의 비율이 높았다. 모든 작물을 무농약으로 하고 있는 비율은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각각 29.0%, 35.3%로 역시 승계창농의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 할 예정이 각각 25.8%, 17.6%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6]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실천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모든 작물을 유기농업으로 하고 있음	5	16.1%	9	26.5%
일부 농산물을 유기농업으로 하고 있음	2	6.5%	1	2.9%
모든 작물을 무농약으로 하고 있음	9	29.0%	12	35.3%
일부 농산물을 무농약으로 하고 있음	4	12.9%	4	11.8%
앞으로 할 예정임	8	25.8%	6	17.6%
당분간 할 예정은 없음	3	9.7%	2	5.9%
합계	31	100%	34	100%

현재 경영면에서 힘든 점이나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는 비승계창농은 소득이 적은 점이 2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용자금 부족, 설비투자자금 부족, 노동력 부족(일손이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승계창농은 설비투자자금 부족이 1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용자금 부족, 소득이 적은 점, 기술이 미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 현재 경영면에서 힘든 점이나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가중치	비율	가중치	비율
설비투자자금의 부족	29	15.6%	40	19.7%
운용자금의 부족	32	17.2%	39	19.2%
소득이 적은 점	51	27.4%	26	12.8%
경영분석 방법을 모르겠음	-	-	6	3.0%
경영계획이 서지 않음	5	2.7%	1	0.5%
기술이 미숙	11	5.9%	24	11.8%
판매가 생각처럼 안됨	8	4.3%	8	3.9%
농지를 얻기 어려움	12	6.5%	15	7.4%
노무관리	2	1.1%	-	-
정보가 적음	1	0.5%	3	1.5%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가중치	비율	가중치	비율
상담 상대가 없음	1	0.5%	1	0.5%
농사지을 작목을 잘 모르겠음	2	1.1%	3	1.5%
후계자가 없음	1	0.5%	1	0.5%
세무대책	-	-	1	0.5%
노동력 부족(일손이 부족)	26	14.0%	16	7.9%
선대의 경영주(부모님)와 의견이 맞지 않음	3	1.6%	9	4.4%
선대의 경영주(부모님)가 맡겨 주지 않음	-	-	4	2.0%
경영 전반	2	1.1%	3	1.5%
기타	-	-	3	1.5%
합계	186	100%	203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현재 생활면에서 힘든 점으로는 비승계창농은 건강상의 불안(노동이 힘들)과 생각보다 휴가를 갖기 어려운 점, 또래가 적다는 점이 가장 높았다. 승계창농은 생각보다 휴가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의 이해와 협력 부분'의 어려움을 들었다.

[표 68] 현재 생활면에서 힘든 점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가중치	비율	가중치	비율
건강상의 불안(노동이 힘들)	29	15.7%	18	9.6%
가족의 이해와 협력 부분	7	3.8%	25	13.3%
마을 사람과의 인간관계	10	5.4%	11	5.9%
마을의 관행	5	2.7%	8	4.3%
자녀 교육	17	9.2%	15	8.0%
사생활 보호	4	2.2%	14	7.4%
교통, 의료 등 생활면의 불편함	22	11.9%	13	6.9%
마을 활동 등에 대한 참여가 많음	16	8.6%	11	5.9%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가중치	비율	가중치	비율
생각보다 휴가를 갖기 어려움	29	15.7%	46	24.5%
또래가 적음	29	15.7%	10	5.3%
배우자가 지역과 농촌 생활을 힘들어 함	4	2.2%	10	5.3%
아이가 지역과 농촌 생활을 힘들어 함	4	2.2%	-	-
기타	9	4.9%	7	3.7%
합계	185	100%	188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영농 후 재배기술 상담처로는 비승계창농은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선도농가 외 농가나 법인'과 '가족, 친지, 지인'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승계창농은 '가족, 친지, 지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선도농가나 법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9] 영농 후 재배기술 상담처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군	1	1.6%	3	4.3%
농업기술센터	16	25.4%	15	21.4%
농협	-	-	2	2.9%
농수산대학 등(교육기관)	1	1.6%	3	4.3%
교육기관 농민이나 법인	4	6.3%	3	4.3%
농가나 법인(선도농가)	11	17.5%	16	22.9%
농가나 법인(선도농가 외)	12	19.0%	5	7.1%
농업자재 및 기계 등 업자	4	6.3%	3	4.3%
가족, 친지, 지인 등	12	19.0%	19	27.1%
기타	2	3.2%	1	1.4%
합계	63	100%	70	100%

향후 받고 싶은 교육으로는 비승계창농은 선진적인 재배기술과 '재무회계, 세무 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영계획의 책정 등이었고, 승계창농은 선진적인 재배기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마케팅, '재무회계, 세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70] 향후 받고 싶은 교육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초적인 재배기술	8	10.4%	8	10.7%
선진적인 재배기술	14	18.2%	20	26.7%
경영계획의 책정 등(경영매니지먼트)	13	16.9%	10	13.3%
재무회계, 세무 등	14	18.2%	11	14.7%
마케팅	11	14.3%	16	21.3%
품질관리, 리스크 관리 등(GAP 등)	6	7.8%	5	6.7%
노무관리	5	6.5%	4	5.3%
인재양성	2	2.6%	1	1.3%
기타	4	5.2%	-	-
합계	75	100%	75	100%

향후 5년 후 농업경영 전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비승계창농은 판로 확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접 판매, 면적 및 두수의 규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승계창농은 규모 확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판로 확대, 신규재배기술 도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 5년 후 농업경영 전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면적, 두수의 규모 확대	25	13.0%	40	19.6%
신규 작목의 도입	11	5.7%	16	7.8%
직접 판매	27	14.1%	16	7.8%
신규재배기술 도입	7	3.6%	22	10.8%
농산가공	11	5.7%	8	3.9%
관광농업 및 레스토랑	3	1.6%	4	2.0%
비용 삭감	10	5.2%	11	5.4%
노동환경 개선	12	6.3%	18	8.8%
판로 확대	39	20.3%	28	13.7%
기술 향상	17	8.9%	7	3.4%
품질 향상	11	5.7%	14	6.9%
단위당 생산량 확대	14	7.3%	9	4.4%
고용 도입	3	1.6%	5	2.5%
법인화	1	0.5%	1	0.5%
선대 경영주로부터 세대교체	1	0.5%	2	1.0%
기타	-	-	3	1.5%
합계	192	100%	204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4) 지역농업과 지역활동

지역농업 주체로 기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서는 비승계창농은 71.0%가 그렇다고 답한 데 반해 승계창농은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표 72] 지역농업 주체로 기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다	22	71.0%	18	54.5%
그렇지 않다	9	29.0%	15	45.5%
합계	31	100%	33	100%

지역과 융화 여부에서도 비승계창농은 90.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승계창농은 76.5%가 그렇다고 답했다.

[표 73] 지역과 융화 여부

구분	비승계창농		승계창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다	28	90.3%	26	76.5%
그렇지 않다	3	9.7%	8	23.5%
합계	31	100%	34	100%

3. 시사점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및 농업 관련 실태 설문 조사를 통해 농지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층 면담 결과

우선 심층 면담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는 지역마다 농지 시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농지를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매매의 경우에는 자금 문제를 겪고 있었다. 임대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식적인 임대계약서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거나 계약 파기와 관련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시설 하우스 등 지상권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과정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와 논농사 위주의 임대와 타 작물 재배의 원칙 문제, 내정자 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었다. 지역 차원에서 청년에게 무상으로 땅을 준다고 해도 사업과 연계되면 농어촌공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런 농지도 잘 나오지 않아 물량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더욱 심각한 건 일방적인 파기나 지상권 문제에 대한 조건이 어떤 식으로든 강화될 경우 이제는 그나마 구하기 힘든 농지를 지역에서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차라리 청년들은 새로운 제도 개선보다는 원래 농지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농사짓고 있지 않는 농지는 청년에게도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가운데서도 특히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들에 대해 농지 확보를 위한 지역 단위의 논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설문 조사 결과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대상 농업 관련 실태 설문 조사의 결과로는 영농상황 즉 토지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여부로 비승계창농과 승계창농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영농 경위

우선 영농 경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농지나 주택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으로는 양쪽 그룹 모두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 순위로 농지의 경우 비승계창농은 부동산업자를, 승계창농은 농어촌공사를 활용하고 있었다. 주택의 경우는 다음 순위로 비승계창농은 부동산업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순'으로, 승계창농은 농협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 확보의 경우는 비승계창농은 농업기술센터, '은행 등 금융기관', 농협의 순이었으나 승계창농은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이 가장 높았다.

농지 확보와 관련하여 양쪽 그룹 모두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부모나 친지, 지인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은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재점검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승계창농의 경우 부동산업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농지를 구입하기 위함이며, 이에 반해 승계농은 농어촌공사를 활용하여 임대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양쪽 그룹 모두 자금확보, 농지확보, 영농기술 습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승계창농의 자금문제는 농지문제와 연동된다고 할 수 있으며, 승계창농의 경우는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기계 및 시설 등 취득비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농기술 습득과 관련해서는 창농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영농기술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가 간 관련 정보 교류 확대나 농업기술원 혹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 준비 단계에서부터 영농 후 1년간 취득한 농지 구입 여부는 비승계창농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향이 강하며 승계창농의 경우는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다. 취득 농지 면적은 승계창농이 비승계창농에 비해 1.3배 높았으며 취득한 농지 금액은 비승계창농이 평균

1억 3천 6백만 원으로 승계창업 약 1억 1천 4백만 원에 비해 약 1.2배 높아 자금확보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농지 이외에도 '기계 및 시설 등' 취득비용에 양쪽 그룹 모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영농을 위한 자기자본금은 승계창농이 평균 1억 4천 6백만 원으로 비승계창농 8천 2백만 원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승계창농의 경우 농지 및 기계, 시설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영농자금 대출로 충당되고 있어 비승계창농의 75%가 대출을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영농자금 대출시 지장을 느꼈던 부분으로는 공통적으로 상환기간이 짧다는 부분과 담보 확보가 높게 나타나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 창농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업경영 상황

농업경영 상황으로는 현재와 영농 초창기 1년차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농업경영 규모 변화는 우선 농업경영 경지면적은 비승계창농은 1년차에서 2019년 현재 1.2배, 승계창농은 1.5배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위 경지면적 가운데 임대는 각각 1.3배, 1.9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양쪽 그룹 모두에서 임대 비율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비승계창농은 현재 82.5%, 승계창농은 97.0%가 임대한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 창농의 농지 임대 확보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작목 변화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아무래도 초창기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시설채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시설채소 비율이 줄이는 대신 '보리, 잡곡류, 곡류'나 과수, 버섯, 수도작 등 작목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계창농은 비승계창농에 비해 처음부터 비교적 다양한 작목들을 시도하다가 현재는 수도작과 버섯 비율을 줄이는 대신 시설 쪽에 보다 과감히 투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산물 매출 변화는 비승계창농은 1년차에서 현재까지 1.3배, 승계창농은 2.2배 증가를 보이고 있었으나 농업소득 변화는 비승계창농과 승계창농 모두 1년차에 비해 현재 줄어들어 매출이 반드시 농업소득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승계창농은 승계창농에 비해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편임을 알 수 있어 안정적인 소

득 확보를 위해 당분간은 농외소득 즉,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는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비승계창농은 78.6%가 그렇지 않다는 결과와도 연동된다고 하겠다.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가 유지되는 지점에 대해 비승계창농이 승계창농에 비해 높은 수준의 농업매출과 농업소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결과는 비승계창농이 기존의 직업을 버리고 농업을 택한 기대치로 짐작할 수 있거나 혹은 승계창농 쪽이 농업의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생계가 유지되는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생계 유지 시기는 '알 수 없음'이 가장 높아 농업이 결코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승계창농의 경우 생계가 유지되는 시점을 9년 후로 보고 있는 것에서는 역시 농업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다.

유기농업과 무농약 실천과 관련해서는 실천의지가 높은 편으로 비승계창농에 비해 승계창농의 실천 비율이 높았고 양쪽 그룹 다 아직은 유기농에 비해 무농약 실천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실천 의지가 안정적인 친환경재배기술의 전수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유지되게 하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영면에서 힘든 점으로는 비승계창농은 소득문제가 가장 높았고, 승계창농은 설비투자자금 부족과 운용자금 부족이 가장 높았다. 양쪽 그룹 모두에서 자금 문제는 힘든 것으로 나타나 준비 과정에서나 실제 영농 과정에서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면에서는 비승계창농은 건강상의 불안(노동의 힘듦), 생각보다 휴가를 갖기 어려운 점, 또래가 적다는 점이 가장 높았고, 승계창농은 생각보다 휴가를 갖기 어려운 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의 이해와 협력을 꼽았다. 비승계창농의 경우, 영농 이유와 비교해 교면 농업은 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고(1순위), 원하는 대로 경영할 수 있기 때문(2순위)에 농업을 하게 된 것에 반해 노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승계창농의 경우 시간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이유(1순위)에 비해 생각보다 휴가를 갖기는 어려운 점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5년 후 영농을 확대해 가겠다는 비율이 양쪽 모두 매우 높은 가운데 향후 5년 후 농업경영 전개와 관련하여 비승계창농은 판로 확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었고 승계창농은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쪽

그룹 모두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각자의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3) 지역농업 및 지역활동

지역농업 및 지역활동과 관련해서는 비승계창농의 경우 지역농업 주체로 기대 받고 있다는 답이 71.0%를 차지했지만 승계창농은 절반 수준이었고 지역과 융화 여부에서는 비승계창농은 90.3%가 그렇다고 했으나 승계창농은 76.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비승계창농은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직은 지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승계창농의 경우 부모의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의 시선에 더욱 민감한 탓인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에서 주체로서 기대받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비승계창농의 경우 농지와 같은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갈 수 있을지 열쇠가 될지 모르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5장 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방안

1. 청년 농업인의 정책 수요

1) 청년 농업인의 기본적인 정책 수요

우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조사와 실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이 생각하는 영농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는 토지와 자금, 교육, 융화, 거주로 구분하였다.

우선 토지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가 필요하며 토지 구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임대 토지 역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자금과 관련해서는 지원 자금의 공정한 선정과 집행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절차의 일원화, 그리고 자금의 금리 인화와 상환 기간의 확대가 언급되었다. 자금 지원 항목과 관련해서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생활과 관련한 현실적인 보조금에 대해 언급되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농업에 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사전교육 장소 및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전문적인 교육과 시설, 자금을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다. 항목과 관련해서는 판로와 유통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정적인 판매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지 임대와 매매 등 농지와 관련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을 맡아 줄 선도 농가에 대한 선정 기준 완화와 이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어야 함이 언급되었다.

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승계창업농과 승계창업농 간의 불화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층 면담 조사 결과에서는 주로 승계창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청년층 모임인 4H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청년농의 나이 제한 상한선을 확대해야 함이 언급되었다. 또한 융화를 위해 청년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 74] 청년 농업인의 전반적인 정책 수요

키워드	내 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농지 확보가 필요 - 임대 토지를 구하기가 어려움 - 토지 구매의 어려움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자금의 공정한 선정 및 집행 - 자금이 지원에 제한이 많고, 절차의 일원화 필요 - 자금의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의 확대 및 금리 인하 - 빠른 자금지원 절차 필요 - 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확대 - 생활과 관련된 현실적 보조금 필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교육 장소 및 기관 필요 -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이 부족함 - 전문적인 교육과 시설 및 자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 - 판로/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선도농가의 선정기준 완화와 농가보상 확대 - 농지임대 및 매매에 관련한 교육 필요
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승계창업농과 승계창업농의 불화 축소 - 청년농의 나이 제한 상한선 확대 -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필요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농인의 주거문제 해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임대 필요 - 단기농업인력지원 - 시범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 필요 - 안정적인 유통채널과 판로 필요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가 있었으며 기타로는 기계 임대와 단기농업인력지원, 시범작물을 해볼 수 있는 공간 필요, 안정적인 유통채널과 판로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2) 농지 관련 정책 수요

농지 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었다. 크게 임대와 제도정비, 농지은행,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임대와 관련해서는 임대를 받지 못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같은 청년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나이 제한이 너무 낮아 농지 임대가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휴경농지에 대한 재임대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농림구역 외의 임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표 75] 농지 관련 정책 수요

키워드	내용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임대를 받지 못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좀 더 많은 기회 제공 필요 - 청년 농업인의 나이 제한이 너무 낮아 농지 임대의 어려움이 많음 - 농지 임대 후 휴경농지의 경우, 휴경농지의 재임대 제도 필요 - 정부 차원에서 휴경지를 매입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하는 제도 필요 - 농림구역 외 임대도 추진 필요
제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자금 지원정책의 정비 및 확대 - 자금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 - 예비농업인 대상 1~2년 임대 제도 필요 - 초기정착에 필요한 토지임대에 대한 안내 - 공무원들의 관행적 태도 변화 필요 - 청년 농업인 중장기 플랜
농지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은행의 적극적 활용 및 상담창구의 일원화 - 농지은행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그 마을 우선 토지활용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융화를 통해 지역 내 토지가 청년에게도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농지 문제 해결 - 토지 공동화로 여러 청년이 함께 농사짓도록 -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대농지 필요 - 마을 단위(소유 등)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동 토지가 필요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농업자금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정비 및 확대 요구가 있었고 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1~2년 임대 제도 및 초기정착에 필요한 토지임대 전반에 대한 안내와 청년 농업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공무원들의 관행적 태도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있었다.

농지은행과 관련해서는 농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상담 창구의 일원화가 요구되었고, 농지은행 방식이 아닌 해당 마을 우선 토지활용이 거론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융화를 통해 지역 내 토지가 청년에게도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농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대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토지 공동화로 여러 청년이 함께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을 단위 공동 토지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2.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방안

1) 제도권

○ 농지법 개정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는 현행의 농지법의 주요 골자인 농지 문제를 경자유전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소유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는 보다 적극적인 농지 활용을 위한 상위법 차원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의 기본 취지를 모두 갈아엎는 개정이 어렵다면 지역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농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완화를 하되 이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벌칙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적으로는 농지의 의미에 대해 범국민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로 여겨진다. 법적으로 규제하는 일에 앞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 농지가 갖는 가치와 기본 방향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안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과연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단계의 논의 과정은 한결 쉬워질 수 있다.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행 농지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 농지은행

현재 농지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농지은행에서는 우선적으로 농사짓는 데 필요한 농지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지 임대는 농지은행만이 그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주로 논의 많은 상황으로 밭에 대한 확보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농지 임대시의 경작 형태와 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나 계약 기간의 확대, 임대 계약 파기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등도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농지은행이 농지임대와 관련한 유일한 합법적인 공적인 기관임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떼어가는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농지의 임대와 관련한 다양한 과정에서 중재 역할 등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임대와 관련하여 철저한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내정자 문제와 같은 오해가 없도록 하고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조례안 마련

지자체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농지 관리 방식 및 주체의 설정 및 권한 등 농지와 관련한 지자체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공공임대농지 조성에 대한 실천이나 개인 혹은 법인 농가 단위에서 공공의 목적을 전제로 한 다양한 이용 방법에 대해 활용 가능한 여건을 열어

주는 등의 노력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와 같은 농지 활용을 위해 광역 혹은 권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용' 형태에 대해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농지 이용 범위 등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해가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진지한 논의들을 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공공임대농지 조성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혹은 도·시군 공용지에 대한 농지로의 활용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군 지역에 있는 정부 공유지나 도 공유지를 농촌 지역의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기반이 없거나 규모 확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우선 이용 활용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농촌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농촌복지 실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는 등 지역 농지의 공공의 목적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러한 목적에 맞게 공공임대농지가 활용 가능한 선정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 농지이용계획 수립

실제 농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도나 시군 단위에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 혹은 그보다 작은 단위인 읍면 단위에서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법으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현재 농지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용되어야 할 것인지, 향후에는 농지이용이 가능한 면적은 얼마나 되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실제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적어도 법에 마련되어 있는 조항들은 준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비제도권

○ 농지위원회(가칭) 창설

다음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가능한 다양한 실천을 해가는 실제 운영 조직으로서 농지위원회(가칭) 창설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마련된 조례안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실제 지역의 농지 실태조사를 담당하거나 농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 역할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지 문제가 지역 안에서 고민되고 논의되어 다양한 이용 실천 노력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 청년 자체 협업농장

청년 농업인 자체적으로도 공동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협업농장 형태의 실천들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홍성군 장곡면의 젊은협업농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전에 농업에 대한 적성과 농촌살이에 대한 적응을 사전에 경험해보는 귀중한 학습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셰어농장은 현재 본인의 농장이 있지만 새로운 작목에 도전해 보거나, 혹은 여성들의 소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도 청년 농업인들에 의한 혹은 이를 위한 협업농장 형태로 고려해볼 직하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협업농장을 지역에 마련함으로써 농지 접근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농사와 관련한 접근 기회를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마을 단위 계획 마련

다음으로 지역에서는 일본의 사람농지플랜과 같이 농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단위 계획 마련을 하고 지역에 새롭게 들어온 청년층에게 농지를 내어주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농업을 승계해나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고령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향후 얼마나 농지가 남을 것인지를 마을 단위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일이 필요

하다. 지역의 농업이 지금의 형태로 계승되려면 지역에 새롭게 들어온 청년 농업인에게 이러한 지역 농업을 제대로 잘 전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승된 농업은 다음 세대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 나갈 밑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단위 계획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을 통해 준비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가는 전 과정 가운데서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3] 충남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계획 로드맵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년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서는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지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충남의 농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나 젊은 층 농업인력의 육성이 쉽지 않은 않다. 특히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저에는 소유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농지법의 한계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만 해도 농지의 이용 증진을 위해 지역 단위의 농업위원회를 활용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마을 단위의 사람농지플랜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농지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으로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조사와 실태 설문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지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와 임대료의 어려움은 결국 농지를 매매하게끔 하고 이것은 대출을 통한 자금확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더 다양한 형태의 농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와 관련한 정책 수요를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하여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농지 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차원의 다양한 지원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 제언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현행의 농지법의 주요 골자인 농지 문제가 ‘소유’가 아닌 ‘이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위법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로서는 임대와 합법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전문가, 지역 단위의 농민들과 현장의 청년들이 함께 꼼꼼히 검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청년귀농 장기교육사업 등 청년 농업인에 대한 생활비 및 교육 지원만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원인 ‘농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청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육성 지원 정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농지를 활용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르는 기계와 설비 등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더불어 이것이 가능하려면 청년 농업인 혹은 예비 청년 농업인에게 어떠한 농업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 총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전체 틀과 순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진정한 청년 인력이 자연스럽게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향후 농사지을 사람과 향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농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청년 육성을 통해 마련하고, 농지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성과 지역 농업의 계승이라는 큰 비전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다음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농지 관리 방식 및 주체의 설정과 권한, 책임 등 농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논의를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맡게 될 지자체 단위의 광역 혹은 권역 중간지원조직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농지 문제와 관련하여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나 시군 공용지에 대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도, 시군 차원에서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의 협업 형태의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지 문제에 관한 지역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마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농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마련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남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물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단위 농지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은 현재 농업농촌이 안고 있는 고령화, 과소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지역 차원

다음으로 지역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내 농지 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청년 단체 등 지역 관련자들이 모여 향후 지역의 농업농촌의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농지플랜과 같이 실제로 고령화된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향후 짓지 못하게 될 농지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새롭게 유입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 혹은 협업 형태 등 농지 관리 혹은 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농지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 육성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을 잘 유지하기 위해 고령 농가와 지역 주민, 새로운 청년층 모두에게 필요한 일임이 함께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는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참고문헌

- 김강호, 마상진(2011). 농업인력육성사업의 경제적 수익 효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4권 제4호. pp. 41-58
- 김기흥(2016).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전략 연구 2016-42. 충남연구원
- 김기흥(2017).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실태 및 정책 방향. 충남리포트 Vol. 288. 충남연구원
- 김기흥(2018).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 지도와 개발, 25(3). pp. 161-173
- 김정섭, 김종인(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1), 33-48
- 김종인, 김정섭(2016).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23(2), 115-122
- 마상진(2011). 농촌활력화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농산업교육학회. pp. 93-110.
- 마상진, 정은미, 김경인(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은영(2014). 농촌활력소와 잠재농업인 육성: 학교4H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이향미(2018). 청년창업농 농촌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농지지원 방안.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임형백(2008). 한국 농업인력육성의 방향 전환. 농촌사회 제18집 1호. pp. 207-240
- 오해섭, 김정주(2002).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청소년교육 및 지원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9권 제2호. pp. 185-197
- 전익수, 김병률(2011). 농업인력 실태와 농업인력 정책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pp. 689-708

- 진종순(2010). 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 pp. 87-106
- 최영창, 박은식, 고정숙, 조영숙(2007). 청년 농업인 육성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농촌 지도공무원들의 인식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4권 2호 pp. 351-371
- 황인욱, 이소영, 주진수, 양주환, 김종숙(2017).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성공 특성 및 연농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구 25(1). 한국지역사회학회. pp. 21-45

· 농지법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농산업 창업지원 계획(안)(2015).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
- 2016년 충청남도 귀농인 육성·지원 계획(2015).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2018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육성계획(2018).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 3농혁신 백서(2018).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온실) 조성 및 임대 사업 지침(안)(2018).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農地法

- 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
-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 農地中間管理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 全國農業會議所(전국농업회의소, 2017). 신규취농자 등의 농지취득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교토부 홈페이지
- 코가시 홈페이지
- Inwood, S. M., & Sharp, J. S. (2012). Farm persistence and adaptation at the rural-urban interface: Succession and farm adjust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28, 107-117

- Koutsou, S., Partalidou, M., & Ragkos, A. (2014). Young farmers' social capital in Greece: Trust levels and collective actions. *Journal of Rural Studies*, 34, 204-211
- Leonard, B., Kinsella, A., O'Donoghue, C., Farrell, M., & Mahon, M. (2017). Policy drivers of farm succession and inheritance, *Land Use Policy*, 61, 147-159
- Zagata, L., & Sutherland, L-A. (2015). Deconstructing the 'young farmer problem in Europe': Towards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Rural Studies*, 38, 39-51

[부록 1] 사전 자문회의 개최

제1차

- 일시: 2019년 4월 22일 16:00~18:00
- 참석자: 한국농어촌공사 세종지소장, 충남연구원 강마야, 김기흥, 이도경
-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세종지소
- 자문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문
 - 기반 없는 청년 농업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제도임을 확인
 - 지역 차원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자율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제2차

- 일시: 2019년 4월 23일 19:00~21:00
- 참석자: 서천군, 논산시, 부여군 등 농민회 현장자문단 5명,
충남연구원 강마야, 김기흥, 이도경
- 장소: 부여군 농민회 사무실
- 자문 내용
 - 기존의 농지문제가 '소유'가 아니라 '이용'하는 측면으로 논의가 마련된다면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활용 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임
 - 마을 단위의 자율, 자치기구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접근이 필요
 -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참고 필요

[부록 2] 청년 농업인의 농업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서는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충남 청년 농업인의 농업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방안을 위한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김기흥 (041-840-1205. kimkh@cni.re.kr)

I.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현재 주요 영농장소는 어디입니까? (도 시/군 면 리/동)
2.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도 시/군 면 리/동)
3. 귀하의 영농 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도 시/군 면 리/동)
4. 귀하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도 시/군 면 리/동)
5.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7. 귀하를 포함하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명
- 7-1.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아들은 몇 명입니까? ()명

8.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농업고교) ③ 고등학교(농업고교 이외) ④ 농업대학교
 ⑤ 전문학교(농학계) ⑥ 전문학교(농학계 이외) ⑦ 대학, 대학원(농학계) ⑧ 대학, 대학원(농학계 이외)

9. 농업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하세요.

① 농가출신이 아님	
② 부모가 농가 출신이 아니지만, 조부모는 농가 출신임	
③ 농가출신임	

10. 영농 상황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하세요.

① 토지 등을 독자적으로 조달하고 새롭게 농업경영을 개시함	
② 가족의 경영 전부 를 계승하고 농업경영을 개시함	
③ 가족의 경영 일부 를 계승하고 (그 일부를 경영상의 책임을 가지고) 농업경영을 개시함	
④ 가족의 농업경영과는 별개로 새로운 부분을 개시함	
⑤ 가족의 농업경영에 고용되어 종사함	
⑥ 배우자 가족의 경영 전부 를 계승하고 농업경영을 개시함	
⑦ 배우자 가족의 경영 일부 를 계승하고 (일부를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농업경영을 개시함	
⑧ 배우자 가족의 농업경영과 별개로 새로운 부분을 개시함	
⑨ 배우자 가족의 농업경영에 고용되어 종사함	

11. 귀하의 영농 전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② 임업 ③ 제조업 ④ 건설업 ⑤ 음식업 ⑥ 자영업
 ⑦ 운송, 배송업 ⑧ 관공서 및 단체 ⑨ 교육관련 ⑩ 소매업 ⑪ 통신정보관련 서비스업 ⑫ 그 외 서비스업
 ⑬ 금융증권업 ⑭ 의료관계 ⑮ 학생 ⑯ 무직 ⑰ 기타()

11-1. 귀하의 영농 전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영업, 판매직 ② 사무직 ③ 기술직 ④ 전문직 ⑤ 관리직 ⑥ 서비스
 ⑦ 보안직 ⑧ 농림어업직 ⑨ 운송, 통신직 ⑩ 생산, 노무직 ⑪ 기타 ()

11-2. 귀하의 영농 전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정무원 ② 계약직 ③ 파견사원 ④ 파트, 아르바이트 ⑤ 기타 ()

	1) 지역선택	2) 농지확보	3) 판매확보	4) 주택확보	5) 자금확보
⑧ 서적이나 잡지					
⑨ 인터넷					
⑩ 농업자재, 기계 등 업자					
⑪ 부동산업자					
⑫ 유통, 소매업자					
⑬ 직업소개소					
⑭ 부모, 형제, 친지, 지인					
⑮ 농어촌공사					
⑯ 은행 등 금융기관					
⑰ 그 외 ()					

16. 영농하는 가운데 힘들었던 점을 3위까지 선택해주세요. [중복불가]

1위:	2위:	3위:
-----	-----	-----

- | | |
|-----------|----------------------|
| ① 상담창구 찾기 | ② 가족의 이해 |
| ③ 지역 선택 | ④ 영농기술 습득 |
| ⑤ 농지 확보 | ⑥ 자금 확보 |
| ⑦ 주택 확보 | ⑧ 그 외 () |

17. 영농과 관련하여 귀하가 현재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3위까지 선택해주세요. [중복불가]

1위:	2위:	3위:
-----	-----	-----

- | | |
|------------------------------|----------------------|
| ① 행정 등의 준비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서 | ② 영농지도체제가 충실해서 |
| ③ 취득 및 임대할 농지가 있어서 | ④ 희망한 작목에 적합한 지역이어서 |
| ⑤ (판매 측면도 포함해서) 도시로의 접근이 좋아서 | ⑥ 자연환경이 좋아서 |
| ⑦ 그 지역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어서 | ⑧ 상담창구에서 소개해줘서 |
| ⑨ 취업할 곳 혹은 교육받을 곳이 있어서 | ⑩ 가족의 고향이 가까워서 |
| ⑪ 고향이어서 | ⑫ 농사짓는 친구가 있어서 |
| ⑬ 배우자의 고향이 농촌이어서 | ⑭ 그 외 () |

18. 영농 전의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을 받았습니까? (농업법인 등 취업은 교육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
|----------|-------------------------|
| ① 받았다 | ☞ 18-1.문항 ~ 18-7.문항에 응답 |
| ② 받지 않았다 | ☞ 문항 19.로 |

19. 영농을 준비하면서 대략 영농후 1년간 필요한 '기계 및 시설 등'(토지취득비용은 제외. 트럭이나 제초기 등 영농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의 취득에 든 금액은 얼마입니까?

() 만 원

19-1. 영농 후 1년간 필요한 비료, 종묘, 연료비 등 '필요경비'는 얼마입니까?

() 만 원

19-2. 영농 준비 단계부터 영농 후 1년간 취득(구입)한 농지에 대해서 선택해주세요.

- ① 구입한 농지가 있다 ☞ 19-3.문항 ~ 19-4.문항에 응답
- ② 구입한 농지가 없다 ☞ 문항 20.으로

19-3. 상기 문항 19-2.에서 '① 구입한 농지가 있다'라고 선택한 분에게 묻습니다.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농지 가격을 기입해주세요.

취득한 농지의 면적	() ha () a
금액	() 만원

19-4. 상기 문항 19-2.에서 '① 구입한 농지가 있다'라고 선택한 분에게 묻습니다. 농지의 취득에 활용한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농어촌공사 ② 농협 ③ 은행 등 금융기관
- ④ 자기자금 ⑤ 그 외 ()

20. 영농하기 위해 자기자금은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영농하기 위해 준비한 자기자본금	() 만 원
이 가운데 농지/기계/시설의 취득, 영농을 위한 자기자본금	() 만 원
이 가운데 생활자금	() 만 원

21. 영농과 관련해 자금을 빌렸습니까?

- ① 빌렸다 ☞ 21-1.문항에 응답
- ② 빌리지 않았다 ☞ 문항 22.로

23. 신규영농에 관해 국가나 광역자치체(도), 기초자치체(시군)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의 유무 및 이용 상황을 모두 선택하여 체크(○) 해주세요. [복수응답]

	1) 지원 없었다	2) 이용했다 (정부)	3) 이용했다 (도)	4) 이용했다 (시군)	5) 이용했다 (농협)	6) 이용했다 (기타)	7) 요건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다	8) 이용하지 않았다
① 교육 지원								
② 농지알선 및 소개								
③ 농지취득/임대에 대한 지원								
④ 기계/시설 취득 관련 지원								
⑤ 세금 면제								
⑥ 주택 알선								
⑦ 각종 지원금 등								
⑧ 기타()								

23-1. 신규영농과 관련한 정책 등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Ⅲ. 농업경영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현재와 영농 초장기의 농업경영 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가족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부분의 경영 상황을 알려주세요)

	현재의 경영상황	영농 당시(1년차) 경영상황	
	몇 년도(2019 년도)	몇 년도 (년도)	
	나이 만()세	나이 만()세	
① 농업경영규모에 대해 묻습니다			
	농업경영 경지면적은?	평	평
	이 가운데 임대는?	평	평
	시설원예의 경우, 시설면적은?	평	평
	축산경영의 경우, 사양두수는?	두	두
② 작목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해 묻습니다			
	작목에 대해 아래 [경영작목 선택지] 가운데 번호로 써주세요	1위	
		2위	
		3위	
	농업생산 외 경영부문이 있습니까	1. 직접판매 2. 농산가공 3. 관광농업 4. 레스토랑 5. 기타	
③ 농산물(농산가공 등 포함)의 매출과 소득에 대해 묻습니다			
	농산물 매출(농산가공 포함)은 얼마입니까		
	농업소득은 얼마입니까		
	본인의 농외소득은 얼마입니까		
④ 취업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가족농업종사자수		
	가족 이외 농업종사자수		
⑤ 영농 고용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월 평균 고용 인원)			
	상시 채용		
	*일용직 농번기(/ / / / / 월)		
	*일용직 농한기(/ / / / / 월)		

* 일용직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에 해당하는 달(농번기 4/5월 등, 농한기 7/8월 등)을 기입해주세요

[경영작목 선택지]

① 수도작	② 보리, 잡곡류, 두류	③ 일반채소	④ 시설채소	⑤ 화훼
⑥ 공예작목(허브 등)	⑦ 과수	⑧ 버섯	⑨ 사료작물	⑩ ①~⑨이외의 경종작물
⑪ 낙농	⑫ 육용우변식	⑬ 육용우비육	⑭ 산란계	⑮ 육계
⑯ 양돈	⑰ ⑪~⑯ 이외의 축산(염소, 말, 타조 등)			⑱ 기타()

24-1.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계신지 상세히 적어주세요.

()

25. 생산물(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처에 대해 판매금액이 많은 순서로 3위까지 대답해주세요. [중복불기]

1위:	2위:	3위:
-----	-----	-----

- ① 농협 ② 농협 이외 집출하단체 ③ 도매시장 ④ 소매시장
 ⑤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⑥ 소비자 직접 판매 ⑦ 기타()

25-1. 상기 문항 25. 가운데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에 대해 출하를 결정한 이유를 선택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출하단체 조합원이어서 ② 집출하 단체의 권유가 있어서
 ③ 상황을 봐가며 판매가 가능해서 ④ 출하처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⑤ 큰 단위로 판매가 가능해서 ⑥ 소량, 다품목판매가 가능해서
 ⑦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서 ⑧ 기타 ()

26. 자재(농업용자재, 비료, 농약 등)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구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3위까지 대답해 주세요.

1위:	2위:	3위:
-----	-----	-----

- ① 농협 ② 농협 이외의 농업용자재전문업자 ③ 대형마트
 ④ 인터넷 판매 ⑤ 각 자재업체 ⑥ 기타()

27.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 ① 대체적으로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있다 ⇨ 27-1. 문항에 응답
 ② 농업소득으로는 생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 ⇨ 27-2. 문항에 응답

32. 영농 후 받은 적이 있는 교육에 관해 해당하는 번호에 ○를 표시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기초적인 재배기술 ② 선진적인 재배기술 ③ 경영계획의 책정 등(경영매니지먼트)
- ④ 재무회계, 세무 등 ⑤ 마케팅 ⑥ 품질관리, 리스크 관리 등(GAP 등)
- ⑦ 노무관리 ⑧ 인재양성 ⑨ 기타 ()

32-1. 향후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를 표시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기초적인 재배기술 ② 선진적인 재배기술 ③ 경영계획의 책정 등(경영매니지먼트)
- ④ 재무회계, 세무 등 ⑤ 마케팅 ⑥ 품질관리, 리스크 관리 등(GAP 등)
- ⑦ 노무관리 ⑧ 인재양성 ⑨ 기타 ()

33. 향후 5년 후의 농업경영의 전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 3위까지 선택해주세요. (고향집 혹은 배우자의 고향집의 일부를 계승, 부문 경영을 개시한 분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부분의 경영상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1위:	2위:	3위:
-----	-----	-----

- ① 면적, 두수의 규모 확대 ② 신규 작목의 도입
- ③ 직접 판매 ④ 신규재배기술 도입
- ⑤ 농산가공 ⑥ 관광농업 및 레스토랑
- ⑦ 비용 삭감 ⑧ 노동환경 개선
- ⑨ 판로 확대 ⑩ 기술 향상
- ⑪ 품질 향상 ⑫ 단위당 생산량 확대
- ⑬ 고용 도입 ⑭ 법인화
- ⑮ 선대 경영주로부터 세대교체 ⑯ 기타 ()

33-1. 향후 5년 후의 농업경영은 어떻게 전개될 예정입니까? [중복불가]

- ① 경영규모 확대 ② 현행 유지 ③ 경영규모 축소
- ④ 타 산업에 종사 ⑤ 농업법인 등에 고용 예정 ⑥ 기타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9-02 · 충남의 청년 농업인 농지 접근 실태 분석 및 농지 확보 방안

글쓴이 · 김기흥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9년 12월 31일 / 발행 · 2019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5(경제산업연구실),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20-3

<http://www.cni.re.kr>

© 2019.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